

第240回國會
(臨時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6月17日(火)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2.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
3. 國際會議產業育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 현안보고
 - 가. 국정홍보처
 - 나. 문화관광부
 - 다. 문화재청

審査된案件

4. 현안보고 2
 - 가. 국정홍보처
 - 나. 문화관광부
 - 다. 문화재청
1.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동채 의원 대표발의)(정동채 · 고흥길 · 김성호 · 정병국 · 신기남 · 권오을 · 정범구 · 정진석 · 윤철상 · 김태홍 · 천용택 · 김희선 · 이훈평 · 최선영 · 김경재 · 정동영 · 김효석 · 임채정 · 이재정 · 정세균 · 천정배 · 배기선 의원 발의) 28
2.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 · 김병호 · 정창화 · 주진우 · 김광원 · 김일윤 · 김정숙 · 박시균 · 박혁규 · 이상배 · 김용학 · 이상득 · 고흥길 · 이원창 · 김성조 · 이운성 의원 발의) 28
3. 國際會議產業育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서병수 · 김진재 · 정병국 · 안경률 · 이원창 · 강신성일 · 심재권 · 박진 · 권철현 · 정형근 · 김무성 · 이강두 · 정의화 · 현경대 · 김용학 · 김형오 · 최선영 · 강창성 · 이운성 · 유홍수 · 홍준표 · 권오을 · 김일윤 · 이상희 · 정문화 · 원희룡 · 이연숙 의원 발의) 28

(10시15분 개의)

○委員長 裴基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李秀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법률안 총 3건과 국정홍보처 및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대한 현안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에 먼저 국정홍보처 현안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은 오후에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현안보고 전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현안보고 기관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보고

가. 국정홍보처

나. 문화관광부

다. 문화재청

(10시18분)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정홍보처 및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鄭柄國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委員長 裴基善** 예.

○**鄭柄國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본회의 일정이 여야 총무 간에 합의되고 일정이 나온 다음에 바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를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초반에 잡히지 않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되었던 첫 번째 일정에서 나중에 또 일정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일정이 나오면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일정도 결정되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裴基善** 존경하는 鄭柄國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상임위 일정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결정된 직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했고 또 가능하면 미리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과 보고기관의 사정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한번 변경하는 관계로 추후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委員**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鄭柄國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고, 저희들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정이 중간에 약간 바뀐 것이 KBS사장 재선임, KBS이사진이 언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KBS사장 재선임 날짜가 조정이 되었

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23일에 상임위를 하려고 했는데 KBS이사가 그에게 발표가 되면서 23일에 KBS사장 선임이 있는 것으로 KBS 쪽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KBS사장이 재선임 된 다음에 국회에서 결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27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가 저희들이 보기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鄭柄國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같은 시기에 상임위 일정을 조정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및 소속기관장 소개와 국정홍보처의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국정홍보처장 趙永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裴基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처는 금년도 국정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홍보역량 집중, 국민참여홍보의 내실화, 사이버 국정홍보의 획기적 개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적극 추진, 기차실 개방 및 정례브리핑제 도입을 통한 국정정보 공개방식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홍보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등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과제를 나뉘대로 열심히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 노사화합 및 침체되어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등 앞으로 우리 처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처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이러한 국가적 현안과제가 잘 마무리되어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집, 국가 재도약의 큰 물줄기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처의 주요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국정홍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黃鉉卓 홍보기획국장입니다.

俞載雄 국정홍보국장입니다.

高昇羽 분석국장입니다.

韓准燁 해외홍보원장입니다.

朴明東 해외홍보원외신협력관입니다.

高錫晩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입니다.

鄭順均 차장은 국무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기획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렇게 하시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감사합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홍보기획국장黃鉉卓입니다.

국정홍보처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구체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구현 홍보집중을 위해서 국정홍보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국민 캠페인 실시입니다. 희망의 대한민국, 대화와 타협, 국민 참여, 경제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텔레비전,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등을 집중 활용하여 시행 중이거나 8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비전을 소개하는 홍보간행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궁금하시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참여, 그리고 평화번영’이라는 책자를 이미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정홍보논리집 시리즈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업무보고하실 때 국정

홍보처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국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봐야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23명의 국민홍보위원들이 시·도별로 현장토론회를 지난 5월부터 7월 하순까지 실시하였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분권·평화번영정책 등을 주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토론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명단,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회를 몇 회 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토론회는 15개 시·도 중 7개 시·도 정도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7개 시·도에서 토론한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KTV도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바 있습니다. 문화일보사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 주제로 부산, 광주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집으로 ‘국민에게 듣는다’도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李元昌 委員 KTV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편성표를 주세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알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편성표를 주실 때 주요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출연진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캐나다 밴쿠버 UBC대학 등에서 통일·외교정책 등에 관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외신기사집, 해외홍보 간행물,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외신을 대상으로 경제, 통일, 외교분야 등 외신회견을 지원하거나 정책해설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공영 PBS 방송을

통해서 방미성과 좌담회를 지난 6월 8일에 개최한 바 있고 일본 닛케이 신문은 한국경제특집을 6월 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미 우호협력관계 확산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 뉴욕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전통문화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20일에는 한일문화비교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사히 신문 특별편집위원 겸 칼럼니스트를 방한 초청하고 홋카이도 신문 등 일본 지방언론사 논설위원장단도 11월 중에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중 계기홍보와 관련해서는 주요 언론회견 및 특집제작을 지원하고 국정홍보처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참여정부의 정책홍보 세미나 및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주관으로 7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며 ‘중국청년보’와 공동으로 한국 알기 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보책자 및 인터넷 등 활용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홍보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정부 홍보에 민간기법도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표기 홍보, 남녀차별개선 정책홍보 강화방안 등 민간 홍보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해당 부처에 지원하거나 활용한 바 있습니다.

수용자 참여확대를 위해서 텔레비전 캠페인 등 정부광고효과 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KTV, 국정뉴스 등 정부매체 대상 수용자의견수렴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화합,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제로 지난 4월에 32개 사업을 선정해서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론수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국민 보훈의식조사 등 총 9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처에 지원하거나 저희 처가 활용한 바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국민 여론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姜申星一 委員 의뢰해서 하는데 따로 정해져 있는 민간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여러 개 여론조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여러 회사에 나누어서……

○姜申星一 委員 몇 개 회사를 상대로 의뢰하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기관이 약 20여 개가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8개 정도를 저희가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회사에도 돌아가면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현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전화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1회 조사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전문가조사라든지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대부분이 전화 여론조사인데 전화여론조사는 1회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姜申星一 委員 1회 1000만원 정도 들어서 몇 사람 상대로 여론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보통 1000명 내외로 하는데 신뢰도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姜申星一 委員 1000명 정도 해서 신뢰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통 활용하는 오차범위 한계가 되겠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저희들이 조그만 지역에서 한 10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여론조사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나 의문이 있는데 국정홍보처에서 하는데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이더라도 신뢰가 높아지게끔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해 보지만 1000명을 상대로 해 가지

고는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조그만 지역에서 할 때도 그런 정도의 규모는 하거든요. 특히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국정홍보처에서 1000명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떤 현안문제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좀 개선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것으로서는 너무나 미진하다고 그럴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8개의 기관에다 하는 것보다도 유력한 민간업체를 한 서너 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여론조사 아이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각 부처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현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이번 방미 이후에 여론조사 하셨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방미 이후에 여론조사 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은 아이템을 어디에서 선정하신 것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하나는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직전에 조사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정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방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본 것입니까? 방미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안 했어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방미결과에 대해서는 5월 18일 방미 직후에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국정홍보처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방일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방일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鄭柄國 委員 왜 안 한 것이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일단 미국방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다는 판단에서 전후 비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본방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러면 앞으로 방일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국정홍보처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방일 여론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그것은 왜 하지 않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방미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라든지 동맹관계 강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전·사후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본방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현안 사항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별도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방일외교 과정이나 방일외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 내고 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일외교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하시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윗분들하고 상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하세요. 그래 가지고 결과를 주십시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저도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아이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정례적으로 각 부처에다 여론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뭐냐 하는 것

을 한번 묻고 하반기에 여론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각 부처에 요청합니다.

○沈載權 委員 그 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그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아이템을 결정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조금 전에 보고 올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방미 전후 여론조사를든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은 저희 처 나름대로 반 정도 주제를 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국정홍보처 나름의 여론조사는 그런 면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각 부처에서 건의하거나 우리 홍보처에서 의뢰하는 여론조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보처에서 각 부처에 대해, 예를 들면 교육부의 NEIS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 및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조직위 측에다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서 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국정홍보처의 기능으로 볼 때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도 파악하고 문제점도 찾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년에 두 차례씩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기보다는 현안에 따라 수시로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에 대해 요청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함께 논의도 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위원님 말씀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오전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생략하시거나 최대한 단축해서 현안질의에 들어가서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委員長 裴基善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정모니터 제도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작업을 추진해서 6월 현재 패널을 구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가용매체의 국민 접근성 향상……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분석국장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99년 국정홍보처 설립 당시부터 생겼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가용매체의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KTV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차원에서 하계 프로그램 개편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월간 만화잡지 ‘야호 코리아’의 활용도도 제고하고 전광판, 반상회보 등도 활용해서 홍보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정부적 인터넷 홍보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부처 간 사이버 홍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정부 대표 영문홈페이지인 korea.net도 포토갤러리, 동영상 코너 등 네티즌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참여기반 확충을 위해 각 부처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참여 코너를 확충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인터넷 국정뉴스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우리 처의 인터넷을 개편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부 대표 인터넷 신문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차원에서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리 담화문 등 대국민 협조사안을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정 맞춤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처의 e-메일 클럽 회원과 재외동포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 광고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TV, 신문 등 중심에서 인터넷, PDP 등으로 매체를 다양화하고 주요 홍보이슈에 대한 사이버 이벤트 및 배너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이미지 제고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14일에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대외홍보실무협의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해외에서도 민·관 홍보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선진 5개국 및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이미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미 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이미지 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해표기 홍보 및 한국 오류시정 활동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13개국에서 한국에세이 콘테스트를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한외국인 대상 산업·문화 시찰과 강좌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경주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단계별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방한·초청 외신을 대상으로 프레스 투어를 실시하고 기간 중에는 외신취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변국 간 교류 확대·강화 차원에서 금년 10월 중에 한·중·일……

○沈載權 委員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지금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동북아 심포지엄을 10월 중에 개최하는데 이 회의에는 한·중·일 학자, 언론인, 상주외신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국정홍보처와 중국의 국무원신문판공실, 한국의 해외홍보원과 일본의 외무성 간 홍보책임자의 정례회의도 활성화하겠으며 언론인 세미나 등 학술행사 및 언론인 교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정보 공개방식 선진화 차원에서 개방형 기자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청사의 경우는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총리브리핑실과 합동브리핑실의 설치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천청사는 재경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청사의 경우에는 이미 5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鄭鎭碩 委員 외교통상부는 독자적으로 운영하

고 있지 않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하고 있습니다.

○鄭鎭碩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그렇습니다.

○鄭鎭碩 委員 그러면 5개 부처가 아니라 외교통상부까지 6개 부처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그렇습니다.

○鄭鎭碩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다음은 브리핑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강을 요청한 문화관광부 등 17개 부처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6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브리핑 요령 등에 관한 매뉴얼도 6월 말까지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정홍보 조율·협력 강화 차원에서 공보관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재난·안전관리 등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홍보 협조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보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언론의 비판보도는 정책에 반영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 해명 및 언론중재위에 반론,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鄭鎭碩 委員 지금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미 단독청사로 독자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운영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취재기자 개방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鄭鎭碩 委員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國政弘報處國政弘報局長 俞載雄 지금 새롭게 바뀐 것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동해표기 홍보 및 한국 오류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문화원

에 가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외국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상당히 왜곡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알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당초 한국관련 시정사업은 75년부터 79년까지는 교육부, 그 당시 문교부에서 했고 80년대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했고 그 이후 81년부터는 문화공보부, 공보처, 국정홍보처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간에 일단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독도라든지 동해 문제 등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타 언론이라든지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방침에 따라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교과서 왜곡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 소관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鄭柄國 委員 그러면 국정홍보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를 들면 실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교섭활동 같은 것은 교육부 직원이 많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외교통상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 교과서 수집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업무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鄭柄國 委員 예.

○委員長 裴基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金秉浩 委員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국민홍보위원 현장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홍보위원 명단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정부 홍보에 민간기법 도입”이라고 해 놓고 “민간홍보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를 들면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민간 컨설팅 회사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金秉浩 委員 그리고 5페이지 밑에 보면 “주요 정책과 여론조사의 유기적 연계”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이미지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정이미지 조사 결과가 있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그것은 6월 20일 전후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국정모니터 운영 효율화”라고 해서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00명 및 이슈별 이해당사자 등 일반국민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언제 완료됩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민간회사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면 이것도 구성되는 대로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명단은 참여하는 분들이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다음에 “언론보도 분석의 입체적 접근”이라고 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미래 예측 기능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정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金秉浩 委員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부처 간 사이버 홍보 협력 강화”해서 “인터넷 홍보협의

회 정례화”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현재는 구성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면 언제 구성을 합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지금 각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오프라인 홍보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다음 7페이지에 “온라인 여론조사 중점 실시” 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네티즌 의견 적극 수렴”이라고 해 놔는데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金秉浩 委員 그다음 8페이지에 “국정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해서 “e-메일 클럽 회원 8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e-메일 클럽 회원은 국내 사람들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그것은 자기의 e-메일 주소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주소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면 e-메일을 어디서 확보했습니다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재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다음 국가이미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부 장관과 민간 전문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알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비전을 소개하는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것, 국민홍보위원 현장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것, 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강화 관련 자료, 주요정책과 여론조사의 유기적 연계와 관련

된 것, 수용자 중심의 KTV 운영 내실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난 1년간 KTV 시청률 조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내용도 많은데 내가 여기다 적어왔으니까 나중에 가지고 가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리고 내가 처장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에 대해서 아주 큰 성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정홍보처의 지침이 타 부처에도 확대·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데도 따라서 하고 있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출입하고 취재하고 기자실을 이용하는 현장기자로부터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국정홍보처의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해 봤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기자들을 상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러면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이상입니다.

○李協 委員 나도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동해표기 홍보 및 한국 오류시정 강화’라는 항목에서 미국 USA Today나 LAT, CNN 등 동해병기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언젠가 TV에서 청년들,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표기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아마 미국 USA Today나 LAT도 그 사람들과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李協 委員 그리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알겠습니다.

○高興吉 委員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같이 주세요.

○國政弘報處弘報企劃局長 黃鉉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홍보가 대단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하시는 일들을 좀 많이 자랑하시고, 특히 자료나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들을 소상하게 자주 홍보하셔서 자료제출 요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鄭柄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처장님,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원칙과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鄭柄國 委員 그것이 공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처장이 그냥 판단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공표도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기본적인……

○鄭柄國 委員 그러면 국정방향은 무엇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참여하는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토인 것 같습니다.

○鄭柄國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盧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e-메일로 하거나,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 가치를 함께 하는 조직이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국정홍보처에서는 사이버 국정홍보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사이버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盧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은 사람의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문화개혁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것이다.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

무원의 절대 복종,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법상이나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을 위배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표명을 하셨고 현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계속 이런 식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확고부동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방향을 어떠한 식으로 국정홍보처에서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이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필히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 여론이 나쁘게 나온다면 이러한 국정운영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 대통령은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과는 다른 문화개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중국식 문화대혁명을 선포한 것이고 차이라면 붉은 홍위병이 노란 노위병으로 색깔만 바꾸어 친위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盧 대통령이 소수와 정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랍의 탈레반 정권 같은 극단적 원칙주의, 도덕적 우월주의, 이분법적 편 가르기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적 정치공작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에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을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의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盧 대통령은 지난 선거 당시 민간모임인 노사모를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의 이러한 방식은 제2의 공무원 노사모 조직인 노사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행정부 공식조직을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공식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5·6공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 같은 이너서클인 노무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정홍보처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은 “내게 투자를 해라, 줄을 한번 서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언급할 수 없는 용어들을 쓰면서 선동하고 있고 대통령

이 공무원에게 노골적인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처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가관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내에 개혁주체조직인 노사공이 만들어진다면 이 조직은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 내 옥상옥이 되어서 동료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반개혁 수구세력이라고 평가해서 인사조치를 하거나 독자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완장 찬 전위부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운영지침에 절대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개혁세력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공개적 협박으로도 들립니다. 총, 칼 대신 인사권으로 협박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개혁독재정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잘못 인식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보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침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혁세력이니, 개혁주체세력이니, 반개혁세력이니 이렇게 이분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공무원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과연 국론통일이 되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실무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신분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국정에 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미 이후, 보고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방미 직후에 방미 외교성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방일 시점, 방일 외교성과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굴욕외교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이것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역시 방미 이후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방미 이후 방일 외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너무 혹독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결과

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 국정홍보처에서는 지난 5월 1일 盧武鉉 대통령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 직후 이 토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鄭柄國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3일까지 홈페이지에 설문지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게재 후 설문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설문시안 7번 항목에 “귀하께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13일 이후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설문지 시안이 바뀐 것이지요.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7번 항목이 없어지고 또 질문이 변경이 되었어요. 4번 항목에 “귀하께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오늘 토론회에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이 “오늘 토론 참여자들의 질문내용이 국민의 관심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설문시안을 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질문지에서 항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항목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7번 항목이 빠진 이유는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언을 하고 실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태도가 진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물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물었는데 태도에 대해서 물은 부분을 바꿨어요. 바꾼 것은 盧武鉉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 잘못된 언행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일자 질문을 던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예산 23억 편법집행에 대해서 정원 증원의 목적이었는지, 정원이 모자라면 왜 모자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鄭柄國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載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沈載權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체코 프라하 IOC총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할 때 오는 국익은 대단히 크지요. 더더욱 2010년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상정할 때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2010년을 상정할 때 그야말로 남북 화해협력에 큰 잔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중요하지요.

특히 지난 4월 말에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미 북한의 IOC 위원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북한도 대단히 협력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 상황, 또 올림픽이 추구하는 세계평화 축제 의의에 비추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대단히 긍정적인 국제 여론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이 불과 15일 앞두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어려운 점도 있어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우리가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2차까지 간다하더라도 최소한 1차에서 40표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국정홍보처에서 평가하는 회의 전망이 어떤지, 그 전망 위에서 남은 2주일을 어떻게 국정홍보처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유치나 하계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프라하 IOC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우리 평창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해서 IOC 측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정홍보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U대회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우선 입장권 판매, 특히 개막일 입장표는 아주 중요한데 대단히 부진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라구요.

무엇보다도 이번 4월 30일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참석을 밝혔지 않습니까? 따라서 출전선수단, 응원단이 올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북한 측과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조총련이라고 부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제일동포들도 응원단으로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사스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마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U대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사스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때까지의 상황 발전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언론정책이었습니다. 그때 국정홍보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도 보니까 기자실 개방, 브리핑제 도입이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시행과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부터 실시될 사항 같았으면 좀더 충분한 논의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면서 논의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리 정부의 언론정책이 경솔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부 나름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정력을 소진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까? 따라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자실 개방 문제, 브리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정책 계획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정홍보처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보는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옳다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내실 있는 준비작업은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보관을 통한 사전면담 신청,

취재원실명제, 취재응대 후 보고서 제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처장, 이 세 이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상황이 어떻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기자실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沈載權 委員 그 이야기보다도 공보관을 통한 사전면담 신청, 취재원실명제, 취재응대 후 보고서 제출, 이런 사항이 지금 집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취재실명제는 아직 저희들이 브리핑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沈載權 委員 지금 5, 6개 부처에서는 이미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취재실명제와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부분 이것은……

○沈載權 委員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떤지, 상황에 대해서 이따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沈載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鎮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碩 委員 앞서 沈載權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沈 위원님 지적사항에 추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했는데 캐나다도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밴쿠버에서 북방으로 수십km 떨어진 지역의 휘슬러라는 데가 지금 개최 장소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밴쿠버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인지 사실 의심스러운 지경이에요.

지금 밴쿠버의 분위기는 이미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고 깃발이 나부끼고, 하여튼 축제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지지여론을 이끌어내는 홍보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캐나다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이 교통문제인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 휘슬러로 가는 것이 거의 원웨이입니다. 아주 비좁은 도로인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근접성, 공항에서 개최지까지의 교통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문제만큼은 캐나다 쪽보다는 비교우위에 있지 않은가,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홍보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 소위 세계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지리나 캐나다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홍보전략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에서의 올림픽 개최, 이것이 주는 상징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작업 이것 역시 홍보전략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이 9일, 세계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왜곡 내용을 밝혔습니다.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일제 점령기에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처음 건국한 나라는 고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엄청나게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2002년 외국교과서 왜곡시정사업 예산에 20여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중에서 올해는 9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국정홍보처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네요.

앞서 沈載權 위원님께서도 브리핑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천청사 같은 경우는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등등의 실무적인 이유를 들고 계신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에요. 과연 취재실명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인지, 처장님께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 애당초 문화관광부에서 홍보업무 운영방안이라고 발표를 해 가지고 각 부처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부처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문화관광부 자체의 홍보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되었던 것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그렇습니다.

○鄭鎮碩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沈載權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취재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실명제를 준수해야 되고 사후에 보고서를 내야 되고 하는 등의 취재관행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취재관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워싱턴 포스트가 세계적인 특종을 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밥 우드워드하고 칼 번스타인이라는 두 견습기자가 그야말로 탐사적인 추적보도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특종을 했지요. 공화당의 공작정치를 폭로한 기사인데 그때 기자들이 그냥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 소스가 있었어요. 딥 스로트(deep throat)라는 이름으로 취재원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딥 스로트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께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개혁주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라면 나라가 잘못되고 공직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언론에 고발할 수도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도 중요한 언론의 취재 소스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봉쇄하고 차단하고 언론의 취재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타 부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裴基善 鄭鎮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委員 李允盛입니다.

아까 처장한테 개방형 기자실 도입과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고 물어 봤는데 오늘 현안보고에 보니까 몇 군데만 되고 전체적으로는 실시가 안 되고 있군요, 그렇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독립청사만 일부

실시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러니까 기 운영되고 있는 5개 부처 즉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국세청, 기상청은 되고 있고 중앙청사는 국정홍보처가 하고 있는 총리 브리핑실은 되고 있고……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을 떨었어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9월 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기에 내가 더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왜 그렇게 야단을 떨고 못매를 온통 맞고 그랬습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군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부처이고 앞으로 확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 운영되고 있는 부처의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무엇이 불편한가,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들어 보고 들은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그다음에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현 정부의 대언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광부 그리고 홍보관련 부서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보는 남의 탓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어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 중심에서 국정홍보처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문일답으로 할테니까 10분 주십시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바보는 남의 탓만 한다.”는 내용에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允盛 委員 제가 생각컨대 처장께서도 과거 편집국장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훈시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홍보처장의 지난 4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내

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4월 15일자 주간지인 ‘미디어오늘’ 같은데 국제언론인협회의 연례 보고서가 한국을 여전히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사정에 대해 외국 언론이 주로 보수언론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취재기자의 지적에 처장은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진보지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일부 언론사들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지만 이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 언론이 왜 국내 소식을 이른바 보수언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裴基善 위원장, 高興吉 간사와 사회교대)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외국에 영자지를 내는 신문들이 주로 한국에서 언론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신문들이기 때문에……

○李允盛 委員 그렇다면 그 영자지 어디가 처장 판단에는 보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현재 한국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允盛 委員 아까 영자신문을 얘기했잖아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그 신문들이 국내에서 시장점유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처장이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명확히 잡아 가도록 국정홍보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국정홍보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불공정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와 관련되는 문제는 국정홍보처의 소관이 아닙니다.

○李允盛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처장이 얘기한 불공정행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명확히 바로잡아 가겠다는 역할이 어떤 일이나 이것이에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과 관련되는 문제는 국정홍보처 소관이 아닙니다.

○李允盛 委員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국정홍보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

엇인지를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允盛 委員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셨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李允盛 委員 국정홍보처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그리고 진보지에서 어떤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李允盛 委員 일부 언론사들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들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한테 직접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고,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신문에서 영자지를 만드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李允盛 委員 이른바 진보지도 영자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런 얘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모 일간지에 의하면 초기 청와대의 언론 관련 참모진영은 미스 캐스팅이었다는 비판이 압도적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이 지목되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바 있습니까? 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부적절한 미스 캐스팅 중에 국정홍보처장도 들어 있습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는 제 자신이 부적절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러면 제대로 된 캐스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대로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게 캐스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允盛 委員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중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정홍보처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보다는 국가비전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정홍보는 잘 하고 있는 것보다 있는 것을 왜곡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에 관한 보도는 정정할 수 있지만 편향적인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그리고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문화원 통합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李允盛 委員 대통령의 편향적 시각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최근 일부 세력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내세워 특정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이 곧 편향된 시각에 맞서는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 질의가 좀 어렵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질의가 좀 어렵습니다.

○李允盛 委員 알았습니다. 해외문화원 통합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현재 작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조정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주문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대답, 그것이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할 말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국무조정실에서 양쪽회의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만간 소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방미 때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USA Today 등 이른바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용을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4억 원이 되는데 2억 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2억 원은 기업하는 사람한테 맡긴 모양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 대한상공회의소가 20%, 한국무역협회가 2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영자총연합회가 각각 10%씩 해서 20%를 책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는 것도 듣고 계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일부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런데 국가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유료광고를 내는 것, 이것을 참여정부에서 할 때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60년, 70년대 개발도상국 독재정권 국가에서나 하던 일이라고 비판해 오던 참여정부가 왜 이 짓을 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제가 “이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 더군다나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기업에게 이렇게 준조세 비슷한 역할을 맡겨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정작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광고하기를 꺼려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비가 4억 원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제계에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겠다, 또 광고를 넘으로써 국가이미지가 좋아지면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6억 정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재정부 쪽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계에 돈을 너무 많이 할당한다 해서 4억 중 2억은 국정홍보처에서 하고 2억만 경제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지금 제 얘기는 6억을 4억으로 하고 4억 중에서 2억을 정부가 책임지고 2억을 기업에 맡겼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칠십 년대에나 하던 광고방법, 정체성이 없는 이때의 정권들이 하던 방법을 왜 그대로 답습했느냐

나 이것입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육칠십 년대 방식의 국가이미지를 광고한다는 그런……

○李允盛 委員 부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면 광고 냈니까? 그냥 6억을 2억으로 한 것만 해도 잘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그것이 아니라 광고를 낸 문제에 대해서……

○李允盛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까?
일본 방문을 끝내고 이제 중국도 방문하시고 러시아도 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예산으로 전면광고를 실으려고 그러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李允盛 委員 이제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계획이 없습니다.

○李允盛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高興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辛基南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辛基南 委員 전에 대통령 방일외교에 대한 한 나라당의 비난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공식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언론에서 “국정홍보처는 외신보도에 대해서만 대응하다가 국내정치권에 대한 대응이 있었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못한 정치공세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당이라고 해도 정부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심한 질책이 있고 비판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보도만이 아니라 국내보도에 대해서도, 또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대변업무를 수행하는 국정홍보처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거나 일본의 관방장관은 정치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아주 일상화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역시 국정홍보처장의 일상

업무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이미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이미지는 국정홍보처와 직결되는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금년 초 2월 9일에 미국 CBS 방송의 간판시사프로그램인 ‘60 Minutes’에 한국 반미감정, 촛불시위 도중에 성조기가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장면과 찰스 캠블 주한 미8군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직후 미국에 의원외교활동차 가 있었는데 아주 대단했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신변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면서 저희한테 호소를 했었습니다. 반한감정이 급속도로 퍼져갔었어요. 바로 이때 국정홍보처 그리고 산하의 해외홍보원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는지, 일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홍보대책을 수립하고 대처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정홍보처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마련된 대책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에 급파하여 신속하게 활동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라크전쟁 이후 중동지역에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될 소지가 보인다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이미지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고정적인 틀, 해외홍보원 운영의 고정적인 틀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인력도 대대적으로 증원되고 비상수단도 강구되는 탄력적인 조직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지한인사들을 중심으로 광고화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이것을 관리해서 그분들에게 홍보의 컨셉과 내용을 공급해 주면 탄력적인 네트워크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국정홍보처 내에 국가이미지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

들고 인력도 배치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상시적인 이미지 점검과 위기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와 몇 개의 홍보원 운영권한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해외홍보원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선택과 집중의 홍보, 국가이미지 위기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高興吉 辛基南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에는 金秉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秉浩 委員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변화와 개혁, 동참입니다. 그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새 정부가 이 나라를 잘 끌고 나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요란하고 혼란스럽기만 했을 뿐 제대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국정홍보처가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국민의 가슴에 와 닿겠는가, 국정홍보가 과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보는 잘 아시다시피 진실성이 없을 때는 홍보를 해 봐도 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인데 국정홍보처가 어떤 데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진실한 홍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이슈들이 터지면서 정부부처 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집단 간에도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보시스템인 NEIS나 스크린쿼터, 한·칠레 협정문제, 물류대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 간 또는 사회집단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이럴 때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그 기준이 공정한 보도를 하듯이 양쪽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잘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하는 것인지 또 홍보를 했으면 그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선 제대로 홍보

되지도 않았고 방향설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또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국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홍보를 하기 이전에 국정이 제대로 질서가 잡혀야만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국정홍보처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은 이른바 주니어보드, 비공식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홍보처에서도 이른바 이 스터디그룹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부처 내에 5~10명 정도의 자발적인 비공식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직접 통신망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지시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활동비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직들이 국정홍보처장도 건너뛰고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끌고 나가면 홍보처장나 간부들의 라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모두가 국민에 대한 충성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직의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조직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결국 공무원이 국민보다도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노선에 봉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수많은 공식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을 잃게 되고 특정 몇몇 소수그룹이 힘을 갖게 된다면 이 역기능도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홍보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가판 구독을 중지하라고 해서 지금 가판을 안 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金秉浩 委員 그런데 통일부가 가판 신문을 사

서 매일 아침마다 판문점에 가서 북한에 갖다 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부처에서는 필요한 뉴스가 있으면 가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빨리 아는 것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정부가 조치를 내려놓고 북한에는 가관을 거둬서 아침 일찍 판문점에 가서 이북에 갖다 바치는데 이것은 무슨 행위인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지, 국정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홍보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高興吉 金秉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홍보처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휴식시간 없이 즉각 답변으로 들어갈 테니까 답변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鄭範九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李協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李協 委員 준비된 것은 서면질의를 하고 평소 생각하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각계 국정 여러 분야에서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의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홍보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00일 이후 언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언론과의 관계를 건전한 긴장관계로 해 나가자, 이것이 민주국가 그리고 개혁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 이 원칙을 천명했는데 건전한 긴장관계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간사, 裴基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00여 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초기와 다르게 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찾아냈는지, 늘 이렇게 건전한 아주 위험스럽든 간에 이 긴장관계만을 계속 해 나갈 것인가? 국정 홍보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국정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매체와 국정홍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

게 마련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이미지에 관해서 홍보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우리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약동하는 나라, 다이내믹한 나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 투자해도 좋은 나라, 같이 협력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쫓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러한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는가?

오히려 사회각계에서 갈등하는 현장,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하는 데모·시위,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갈등, 고속도로를 막고 벌어지는 집회, 경찰과의 대치모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영상과 신문을 통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국정홍보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정말 역동적이고 미래 희망의 이미지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처장께서 5월 27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시면서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브리핑하시는 담당관들의 전문성 보완문제 그리고 브리핑을 담당하는 공보관들의 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충실하게 보도되고 표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와의 업무 접근성에 관한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申星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申星一 委員 한나라당 대구 동구 출신 姜申星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즉답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KTV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계 프로그램 개편 이후 2시간을 연장해서 방송하고 있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姜申星一 委員 그리고 생방송 토론프로그램

‘클릭 10p.m’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2월 25일부터……

○姜申星一 委員 금년에 시작한 것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姜申星一 委員 그러니까 KTV가 방송을 하면서 2시간 연장을 했고 이 토론회가 유일한 라이브 방송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姜申星一 委員 가끔 저도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KTV의 일반시청자의 관심이랄까 시청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화가 왔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2시간으로 연장한 것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청률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KTV로서는 생방송 토론회는 처음이니까 나름대로는 아주 새로운 기획프로라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 시청자들의 관심을 조사해 보세요. 조사를 해서 종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세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홍보 쪽에서 ‘주재국 지한인사·유력교포 명예공보관 위촉 검토’라고 했는데 지금 주재국이라는 것이 우리 홍보처의 해외 주재국이라는 얘기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姜申星一 委員 그 주재국 중에서 요즘 제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재국이 미국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姜申星一 委員 미국에서 지한인사라든지 유력교포 명예공보관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위촉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나 검토하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완전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향후에……

○姜申星一 委員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대미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 대통령 방미 때 처장이 동행했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는 안 갔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부처보다도 국정홍보처에서 책임 있게 검토해서 운용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검토를 하게 되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잘 알겠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또 하나 U대회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주요 국제행사 활용 전략적 홍보추진”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대구 U대회에 대한 홍보를 국정홍보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희 직원이 벌써 오래 전부터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U대회 조직위원회예요? 제가 조직위원으로 있습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국정홍보처 직원이 이미 오래 전에 파견을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이런 것은 일단 제가 질의로만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姜申星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鐵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鐵相 委員 민주당의 尹鐵相 위원입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라고도 하고 문화의 세기 또 이미지의 세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한일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격상시켰다고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월드컵 개최 1주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을 보면 응답자의 96%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이것은 참으로 국정홍보처에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 주요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호주 고등학생용 사회과목에는 35년간의 일본 점령기 동안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한국의 대통령은 金泳三 대통령이며 그 지지율이 80%가 넘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이

2003년인데 최근 호주의 고등학생용 교과서에 말하자면 10년 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학생용 사회과목에서도 1600년 전부터 300년 동안 한국은 중국의 통치 아래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모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과 결혼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한국인들 중 다수는 무당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미국의 고등학생용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趙 처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이웃나라인 베트남과 대만 등의 나라에서도 한민족이 처음 건국한 나라는 고려라고 표기하는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고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은 초가집이 있고 소가 쟁기를 끄는 모습의 나라라고 연상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같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중 일본은 화려한 현대사회로 진입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세계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새기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현재 실상이 왜곡되게 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정홍보처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왜곡된 교과서의 표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홍보처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왜곡 표기문제가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98년 10월 2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의 속국이다. 미 보호국이다. 청일전쟁 이후에 독립된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처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러한 여러 나라 교과서의 잘못된 오기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련부처와 어떻게 상의해서 이러한 오기를 잡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興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委員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趙 처장을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사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정홍보처가 잘 되고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야 국정홍보처장도 신이 나고 의욕이 생길 텐데 사실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안 되어 가지고 취임 초기의 국민 지지율에서 40, 50%씩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국정홍보처장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말 바꾸기라든가 부적절한 언행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뒷다리를 잡아서 그렇게 된 현상인지 거기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李允盛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방미·방일 외교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갈 때 국정홍보처 예산으로 2억이라는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가 외국신문에 이런 광고비를 지출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또 지출했다면 어느 세목에서 광고비를 지출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장소·방중 외교에도 이런 광고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광고가 국정홍보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기업의 총수들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평가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다, 주니어보드팀 구성이다, 개혁주체 세력의 형성이다 해서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 부처 또는 청와대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기성 공무원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 가지고 사실상 할 일 없이 눈치나 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주니어 보드팀 구성이

라든가 개혁주체 세력의 형성이라는 얘기가 없어져야 되고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국정홍보처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새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제도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조직 형성이 국정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 공직사회에 대한 엄밀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高興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成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委員 金成鎬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홍보처가 현재까지는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홍보업무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저는 사실 민주적 취재시스템의 도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국정홍보처의 조정으로 인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각 부처가 반드시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언론정책의 문제라기보다 각 부처에서 필요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왜냐하면 초기에 문광부에서 그런 방침을 발표했을 때는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처의 홍보업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을 발표하기 전이나 홍보업무를 발표하기 전에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협

의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국정홍보처에는 훌륭한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는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언론에서의 그런 오해와 논쟁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니까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보관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문제, 또 홍보업무가 많은 부처의 경우에는 현재 2, 3급인 공보관을 1, 2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정홍보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또 오랫동안 언론 홍보업무 쪽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부이사관에서 국장으로 승진되면서 초임 국장들이 공보관을 맡았는데 초임 국장들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하고, 또 현재 2, 3급인 공보관의 직급을 1, 2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브리핑제의 도입과 부합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처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처에서 점진적으로 대변인제에 대한 개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한 이후에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자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조치니까 국정홍보처 쪽에서 행자부 쪽에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의 일정이 오전에는 국정홍보처를 하고 오후에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 끝낼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또 적절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분의 위원님 답변만 하셔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핵심질의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지체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존경하는 鄭柄國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개혁주체세력화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최근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이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鄭柄國 委員 핵심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무엇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는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정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국정을 개혁해 간다는 것이 국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현재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하게끔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鄭柄國 委員 그러면 그러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명확하게 국민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국정홍보처의 역할이고 임무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鄭柄國 委員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국정방향이 무엇인지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홍보처의 수장인 처장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원칙과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원칙과 신뢰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는 모든 공무원이 원칙과 신뢰에 어긋나게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낙오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국정홍보처에서는 지금 개혁주체세력을 만들었어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희들은 개혁주체세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업무혁신팀은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홍보처장께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정철학이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鄭柄國 委員 지금 대통령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은 그 말씀의 취지를 즉 보면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원칙과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등등의 것을 좀더 변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柄國 委員 예를 들어서 국정홍보처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을 만들었다면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볼 때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변화, 개혁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거

나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보다는, 취지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감사원을 내세워서 국정철학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를 감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잘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어떤 취지예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까지 감사하기에는……

○鄭柄國 委員 보세요. “근본적인 개혁은 사람의 행동양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문화개혁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것이다.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말이에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국정을 수행하는 개개의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개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을 감사하기에는 힘들어요.

○鄭柄國 委員 이것 보세요. “올 연말이 지나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 반대로 가거나 안 가는 사람, 옆길로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글썽, 직역을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까……

○鄭柄國 委員 지금 처장께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鄭柄國 委員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보세요. 국정홍보처장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야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어땠어요. 국정홍보처장 개인의 의견을 물었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이것이 지금 왜곡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대통령의 진의와 뜻이 잘못 왜곡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홍보처에서는 대통령의 순수한 뜻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공무원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이 국정홍보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鄭柄國 委員 파악을 하셔서 이 말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내게 투자를 해라. 줄을 한번 서라.”라고 했단다가 이런 부분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처장,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자구해석에 너무 그렇게……

○鄭柄國 委員 자구해석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의를 다시 한번……

○鄭柄國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라든가, 지금 일련의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대통령의 신뢰가 무너지고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어요.

대통령 본연의 취지가 아니라면 국정홍보처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되묻든지,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국정홍보처장의 역할 아니에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잘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장이 무슨 진의인지도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국정홍보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 여쭙보고 개별적으로 답을 주세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나머지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載權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질의 딱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부분들은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세계에 홍보관이 나가 있는 곳이 24개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동계 올림픽의 최적지가 평창이라는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IOC위원들을 대상으로도 평창을 적극 소개하고 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IOC총회가 7월 2일 프라하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국무총리께서 대표단과 함께 참석을 하셔서……

○沈載權 委員 국무총리께서 가십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28일 정도에 출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영문으로 된 홍보물도 보내 주실래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예.

○沈載權 委員 아까 제가 현재 홍보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홍보계획으로 세웠던 것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도 몇 가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2주 남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저로서는 우리 평창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려운 점이 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애써 주시고요.

아까 제 질의에서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무총리가 가시면 좋지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다음은 金秉浩 위원님 질의사

항 중에서 핵심질의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가관 관련해서는 지금 아는 사실이 없어서 통일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면 주니어보드, 정부에서는 그 조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어느 분은 개혁주체세력이라고 하던데 그 조직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스터디 그룹……

○金秉浩 委員 지금 홍보처 안에도 개혁팀이 있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업무혁신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업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金秉浩 委員 업무혁신팀이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시원찮으니까 이른바 스터디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업무혁신팀이 저희 처에서는 내부적인 것만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바깥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金秉浩 委員 어쨌든 밖에서 걱정도 하니까 국정홍보처에서 내부용으로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된 것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라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金秉浩 委員 홍보는 빨리빨리 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해야 그것이 홍보되는 것이지 타이밍을 놓치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제가 볼 때는 스터디 그룹 운영은 인위적이고 강제할 사안은 아니고요.

○金秉浩 委員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뭘……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자발적인 참여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니까 국정홍보처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단든지 등등의 홍보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스터디 그룹이 운영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秉浩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해집단 간에 충돌하는 사안도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해가 충돌되고 의견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 이럴 때 국정홍보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지금 충돌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등 몇 개가 있는데 부처 간에 충돌하는 것은 조정이 되지 않는 한 홍보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金秉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불안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느 정도로 간다는 것이, 국가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가 정해 주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야 ‘아, 최소한도 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해서 맞춰서 뭘 할 텐데, 머리 아프고 입장 곤란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노사문제라든지 또 양자간에 대립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쪽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결정이 완전히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秉浩 委員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회 앞에서도 그렇고 사회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매일 시끄럽잖아요. 정부가 딱 부러지게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을 빨리 정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안 되면 국정홍보처에서 국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부처에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시간을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秉浩 委員 빨리 액션을 취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매일 생각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불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協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李協 委員 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에서 어떻

게 하면 더 건전한 이해와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金秉浩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이미지가 불안한 나라로 바뀌는 것 아니냐, 화염병이 나오고 데모대가 그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외국에서는 전쟁 났느냐고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국가의 홍보대책에 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참여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존경하는 李協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과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라는 기본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총론의 입장에서 앞으로 관계개선, 각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에 두 번째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주관으로 20개 부처 42개 사업 등을 이미지제고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안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에 만전을 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高興吉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100일 만에 급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홍보처장은 생각하시는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국정홍보처장의 국정홍보 방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언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홍보라든지 대언론관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국정홍보처장으로서 저 자신도 상당히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좀 안 좋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라든지 북핵문제라든지 최근에 경제가 활황이 되지 못하고 불황기에 접어드는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鄭鎮碩 委員 취재관행을 개혁하는 문제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홍보업무 운영방안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타 부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가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취재실명제라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취재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취재원은 원래 보호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취재원 실명제는 기자들이 밝히고 싶으면 밝히고 밝히기 싫으면 밝히지 않게끔 기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鄭鎮碩 委員 지금 각 부처에서는 문광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로 취재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광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요? 과거의 관행처럼 그대로 취재되고 있는 것입니까?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브리핑룸과 관련한 것은 국정홍보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원 실명제 같은 것은 지난번 문광부장관의 해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안 하는 것으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鄭鎮碩 委員 문광부에서 애초에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이라는 안이 다른 여타 부처까지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문광부에서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문광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문광부장관께서 해명을 해서 취재실명제는 기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게 됐습니다.

○鄭鎮碩 委員 개방형 브리핑룸제도 이외에는 다른 제도를 도입한 것이 없는 셈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國政弘報處長 趙永東 특별하게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취재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으로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李允盛 위원님, 鄭範九 위원님, 高興吉 위원님, 沈載權 위원님, 李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두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정부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홍보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盧武鉉 참여정부 국정 5년의 계획서를 지금 국민들한테 잘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리를 보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대화와 타협 이런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급변하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요구하는 바를 모두 다 털어놓는 현장에서 과연 이와 같은 국정의 4대 원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연 참여정부의 원칙과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100년 전과 같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지혜와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못자리판을 잘 만들어서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고민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금년 8월까지, 참여정부가 시작되고 6개월 안에는 반드시 희망의 프로그램을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현안보고와 법률안

심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정홍보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裴基善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현안보고에 앞서 법률안 3건에 대한 심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國民體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동채 의원 대표발의)(정동채 · 고흥길 · 김성호 · 정병국 · 신기남 · 권오을 · 정범구 · 정진석 · 윤철상 · 김태홍 · 천용택 · 김희선 · 이훈평 · 최선영 · 김경재 · 정동영 · 김효석 · 임채정 · 이재정 · 정세균 · 천정배 · 배기선 의원 발의)

2.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 · 김병호 · 정창화 · 주진우 · 김광원 · 김일운 · 김정숙 · 박시균 · 박혁규 · 이상배 · 김용학 · 이상득 · 고흥길 · 이원창 · 김성조 · 이윤성 의원 발의)

3.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서병수 · 김진재 · 정병국 · 안경률 · 이원창 · 강신성일 · 심재권 · 박진 · 권철현 · 정형근 · 김무성 · 이강두 · 정의화 · 현경대 · 김용학 · 김형오 · 최선영 · 강창성 · 이윤성 · 유홍수 · 홍준표 · 권오을 · 김일운 · 이상희 · 정문화 · 원희룡 · 이연숙 의원 발의)

○委員長 裴基善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沈載權 委員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예, 말씀하십시오.

○沈載權 委員 최근 스크린쿼터제의 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 유지, 더 나아가서 우리 영상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적극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히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전

체의 의견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당 간사께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아주실지의 여부에 대해 의논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후 회의 시작 때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高興吉 委員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과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존경하는 沈載權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논의는 간사들 간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鄭柄國 委員 위원장님,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중에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고 서로 주장하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논리로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데 경제부처의 입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金振杓 경제부총리를 27일 상임위원회 때 출석시켜서 경제부처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께서는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裴基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사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신 鄭東采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東采 議員 鄭東采 의원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출연에 있어 정부 외의 자는 지원대상을 지정하여 출

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연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금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기금 출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고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출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정출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 기업 등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사용목적 등을 지정하여 출연자의 의사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금 출연 장려 및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유사한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를 통해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법 개정의 취지를 헤아려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裴基善 鄭東采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을 權五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순서입니다. 제안자인 權五乙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발의자이신 金秉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秉浩 議員 金秉浩 의원입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

업을 육성·진흥시키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국제회의와 관련된 각 관련 부처에서도 법이 개정되기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고 관련 각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방안이 조속히 법률로서 명시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국제회의시설 건립계획 등등을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와 전문적·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제회의산업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과 국제회의 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유치 개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제회의유치 개최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국제협력,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기타 등등의 국제회의와 관련된 운영, 유통, 정보교류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진흥기금 중에서 국외여행자 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裴基善 金秉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孫俊哲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俊哲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정출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출연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개정은 기금 출연자의 출연목적과 기금 사용처를 합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출연자의 출연의도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출연의욕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프로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 추세를 감안할 때 기금에 대한 지정출연금제도의 도입은 기금수입 확대에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정출연금제도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용도를 지정함에 있어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의 특성에 따라 지정출연금제도의 운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정출연금제도는 자칫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단체 간의 갈등 등을 초래하거나 기금의 공익적 측면이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출연금제도의 여러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정출연금제도의 입법형태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법취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고문서, 목판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95년 문화관광부 인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2001년에 개원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동 재단 설립목적의 중요성과 지금까지의 역할과 업적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실제로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민족문화추진회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국학진흥원을 위해 별도의 육성·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동 재단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의 법문 구성을 보면 재정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근거규정과 연구요원의 파견요청 등의 인력지원 규정, 자료수집을 위한 조항 등 한국국학진흥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 등 조문의 보완 및 일부 자구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산업육성예안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3번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을 보면 당기 기금조성규모 3000억 중 41%인 1269억 원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운용에는 매년 상당한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육성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측면과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제회의산

업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식이 직접 대여 또는 보조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육성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기금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상충되며 새로운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동 재원을 직접 대여 또는 보조형태로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지원 규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최근 4년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연간 약 3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므로 동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국제회의시설 건립현황을 보면 부산, 제주 등 컨벤션센터 및 호텔 회의장 등 107개 회의장 시설이 확보되어 동시에 12만 7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고양국제전시장 등의 시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 시설의 수급균형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보며 국제회의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정안의 국외여행자 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 3년간 평균수납 실적으로 볼 때 약 100억 원의 규모에 이릅니다. 최근의 지원실적을 감안할 때 이 100억의 규모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재원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裴基善 孫俊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한국국학진흥원 육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지방문화연구기관의 설립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테두리 내에서 별도의 지방기구를 갖는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별도의 법안을 가지고 운영·육성을 해 간다면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고 연구에 중복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沈載權 위원님.

○沈載權 委員 孫俊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역시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특정기금의 사용을 명기하게 될 경우 인기분야에 치중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도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보내온 자료도 즉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기존 국학연구기관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산업육성예안법률도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2001년 8월에 이미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18개 민·관단체들이 한국컨벤션협의회를 설립해서 기존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복되는 않는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高興吉 위원님.

○高興吉 委員 저는 대체토론을 여기서 진지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3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오는 23일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전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東采 議員 위원장님.

○委員長 裴基善 鄭東采 의원님.

○鄭東采 議員 제가 제안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방금 沈載權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간단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裴基善 예.

○鄭東采 議員 지적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 등에 사용하게 되며 지정출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기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는 출연은 제한될 것이므로 공익적 측면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현행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은 종목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원칙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출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편중지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공단이 지정기부금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서 시행한다면 편중지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겠지만 법안심사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에 대한 법률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현안보고는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순서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부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李滄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裴基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4월에 이어서 우리부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IOC총회가 15일을 남겨 두었습니다. 현시점에서 강원도 평창 2010년동계올림픽유치 전망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대처방안과 이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5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생한 문화재 강탈사건의 진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으로 여러 위원님과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주요간부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吳志哲 차관입니다.

裴鍾信 차관보입니다.

申鉉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韓秦洙 중무실장입니다.

李成元 문화정책국장입니다.

白鉞 예술국장입니다.

李普京 문화산업국장입니다.

權慶相 관광국장입니다.

金泰根 체육국장입니다.

金斗顯 청소년국장입니다.

金讚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成南基 예술원사무국장입니다.

李建鏞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李建茂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南基心 국립국어연구원장입니다.

林炳秀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金明坤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吳光洙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尹美容 국립국악원장입니다.

李鐘哲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보고드릴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여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문화관광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 및 대책, 대구하계U대회 준비상황 및 지원대책,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추진,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사건 후속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망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5일 후인 7월 2일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됩니다.

추진경과는 작년 8월 평창, 밴쿠버, 잘츠부르크 3개 도시가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IOC 조사평가단이 평창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금년 4월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2010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IOC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서 호평을 받았고 북한 장웅 IOC 위원의 평창유치 지지발언 성과도 있었습니다.

유치 전망은 금년 2월 IOC 평가단의 현지실사를 계기로 해서 3개 도시가 대등한 입장에 서있고 그동안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유치활동을 편 결과 상당수 IOC 위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최도시 결정은 투표 IOC 위원의 과반수 즉 59표를 확보해야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IOC 위원이 총 12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후보지의 IOC 위원 등 10명을 제외하면 116명이 투표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59표를 확보해야만 개최도시가 결정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전방위 유치활동을 전개할 경우에는 유치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고려사항으로서는 현재 런던, 파리, 라이프찌히, 마드리드, 모스크바 등 다수의 유럽도시들이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같은 대륙의 잘츠부르크 대신 밴쿠버를 선택하는 표출림이 우려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범국가적 유치역량을 총결집해서 막판 득표활동을 강화하고 7월 2일 IOC 총회에서 최상의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해서 최종표심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성향의 IOC 위원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프로그램 등 평창의 차별화된 대회 개최계획을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명분과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외 평창 인지도 제고 및 국내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서 CNN 등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국내에서도 중앙언론과 TV,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국내 유치분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하계U대회 준비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하계U대회는 현재 대회 시설인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아파트 건립은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IBC, MPC 등 미디어센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부호텔도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회인력 및 물자는 차질 없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8월 21일과 31일의 개·폐회식 준비는 현재 차질이 없고 성화 채화는 서울 성균관과 이태리 토리노에서 각각 해서 포항 호미곶에서 합화를 해서 전국을 12일간 U자 형태로 봉송하는 형식으로 해서 8월 21일에 개회식에서 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육상대회 등 13개 종목대회를 개최하여 예행연습을 실시해서 대회 운영능력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판매는 개·폐회식은 5월 1일부터 행사 당일까지, 일반경기는 6월 1일부터 경기당일까지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기별 행사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참가 및 사스대책입니다.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를 위해서 5월에 국내 관계기관끼리 회의를 했고 6월 하순경에는 남북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스감염 위험지역의 대회참가자에 대해 출국 전 건강검진 확인요구 및 입국 시 검역조치

를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부터 모금되어 온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490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 문예진흥기금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16대 대통령선거 시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공약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모금 폐지에 따라 기금조성 정책을 전환하여 향후 5년간 문예진흥사업비 부족분 2500억 원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0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분 217억 원을 이미 기획예산처에 국고반영하도록 지원 요구했고 한편으로 통합복권법 제정 및 경륜·경정법 개정 시 사업수익금 배분에 문예진흥기금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고지원 및 여타 재원 즉 로또복권 및 경륜·경정 수익금 활용 등의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복권법 제정 시 로또복권 수익금 용도에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향이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경륜·경정법 개정 시 문예진흥기금의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 참여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와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출연 협의를 계속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문광부에서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지금 현재로서는 1조~1조 5000억 정도를 해야 연 5% 이자가 나온다고 할 때 500억~600억 정도 이자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것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절대 절명한 사안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 총액의 목표를 얼마로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총액 상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지원액수가 매년 틀려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연간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통합복권법에 의해서 몇 %다’ 이렇게 안을 제시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뒤를 하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접근하지요. 막연하게 필요하다는 필요성, 당위성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야지요. 올해만 지나면 당장 모금 자체가 폐지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해 보세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금년 말이면 약 5000억 정도가……

○鄭柄國 委員 5000억이면 현재의 금리로 얼마가 나오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한 250억 정도 나옵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을 기준으로 500억, 600억 정도를 확보하려면 500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5000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장관님, 내년에는 문예진흥지원금이 현재 수준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5년간 문예진흥사업비 부족분이 250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년 후에 1조 5000억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목표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다 공약을 하셨는데 1조를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최대치가 1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1조 5000억을 두고 봤을 때 올해 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조인데 그 1조를 현재의 은행금리 5%로 봤을 때 그것이 500억이 되고, 또 그것이 5년간 2500억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1조 5000억이라는 것은 5년 뒤의 가정된 계산이니까 지금 당장 그 액수가 기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씩 늘어나서 5년 뒤에는 결국 1조 5000억의 기금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년간 2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 500억씩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금 약 250억 정도, 다음 해에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50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륜·경정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통합복권법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의 안은 통합복권법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그 시행령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 것입니다마는 10% 정도를 저희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의 잠정적인 안입니다.

○鄭柄國 委員 내년에 문예진흥사업비로 지출할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전체적인 예산 액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족분은 2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217억을 조달할 방안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국고 지원으로 217억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기금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식물로 한다기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국고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국고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합복권법이나 경륜·경정에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鄭柄國 委員 경제부처나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기금관리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기금을 축소하거나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기금을 통한 방법보다는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복권법이라든지 경륜·경정에 관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鄭柄國 委員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경제부처에서 기금 폐지 법안을 내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복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기금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재원을 바로 쓰는 것이지요.

○鄭柄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다음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과는 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개방조치를 이미 실행했고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추가 개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6월 7일 한일 정상회담 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대중문화 개방 추진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 및 쟁점은 기 개방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긍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고 부정적 영향 등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鄭範九 委員 잠깐만요, 관련 질의가 있는데 자료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개방이 안 된 채 남아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지금 현재 미 개방 분야는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 음반은 일본어 가창음반, 애니메이션은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영화 애니메이션과 연동이 되고 게임은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 방송은 오락용 방송프로그램, 예를 들면 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동안 개방 결과 부정적인 것이 별로 없다, 이것은 장관께서도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개방 성과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러면 내부 분석을 하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있습니다.

○鄭範九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柄國 委員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차, 2차 개방 이후에 영향평가를 한 연구결과 보고서는 있는데 3차 개방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3차 개방 이후에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것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준비가 바로 되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예.

○金秉浩 委員 영화는 어떤 것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영화는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입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푼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그것이 미개방 분야이기 때문에 꼭 푼다라기보다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金秉浩 委員 아니, 추가개방 기본원칙이 이래가지고 무엇인가 푼다는 전제이지 묶어 둔다는 전제는 없잖아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추가개방을 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는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秉浩 委員 꼭 푼다는 원칙은 아니지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푼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沈載權 委員 지금 3차 개방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전면개방인데 더 선별할 뭐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장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영향이라든지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만 이 중에서 어느 장르를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 개방할 것인지를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개방 정도를 놓고 볼 때 이제 남은 것은 전면개방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선별해서 4차, 5차 이렇게 할 소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개방을 하면서 항상 단계마다 그 분야의 사람들, 또는 문화산업 분야의 사람들과 협의하고 조율해 오면서 추가개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상 받은 작품을 먼저 개방했고 다음에는 15세까지 개방했고 3차에는 18세까지 개방했고 지금부터는 18세 이상의 영화를 개방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영화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면개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소비되는 것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하면 성인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극장에서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전면개방은 영화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본어 가창 음반이 있는데 이것을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이 문제가 됩니다. 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방송계와 협의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沈載權 委員 필요하다면 나중에 질의 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개방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가개방 재개를 건의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돌출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개방하는 기본원칙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거사 문제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화예술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추가개방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마는 발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委員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서 추가개방 계획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확정시기가 잡혀있어요?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아직 시기도 확실히 언제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李元昌 委員 벌써 금년 6월도 지나가는데 언제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내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금년 내에는……

○李元昌 委員 이렇게 무책임하고 영성해요. 시기가 대강 언제쯤이라는 것은 밝혀 줘야지 이리다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또 해요?

최종 확정이 언제예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일본 대중문화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총리 신사참배 문제로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단해 오고 있었고 개방 시기, 규모, 범위를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로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개방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정해졌고 범위, 시기, 규모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李元昌 委員 주무장관의 입장에서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남아 있는 개방만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李元昌 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 및 발표’ 이래서 언제 어느 때쯤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말씀만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고할 때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文化觀光部企劃管理室長 申鉉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사건 후속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건 전말은 지난 5월 15일 강도 2명이 공주박물관에 침입하여 강도는 전시실 1층의 진열장을 부수고 금동불상 등 4점의 문화재를 탈취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강도를 검거하

고 도난 당한 4점의 문화재를 훼손 없이 회수, 수장고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안전관리 대책은 전문경비업체와 합동으로 국립박물관 문화재 안전관리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박물관별 보안장치의 설치·작동 등 문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鄭鎭碩 委員 공주박물관 문제는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장관께서 사건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鎭碩 委員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국립박물관, 맞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사고현장을 다녀왔는데 참으로 국민들 앞에, 주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가보니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국가 유물을 도굴범들에게 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 쪽으로 2개가 향해 있더라고요. 당직실로 들어와서 당직근무자를 제압하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니까 1층 전시실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CCTV도 없고 아무런 체제장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안 일인데 이번에 도난 당한 전시실은 전시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공주박물관에서 강당으로 쓰던 곳인데 유물 수가 늘어나니까 강당을 전시실로 개조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 한 거예요. 문화재 관리대책에 정말 소홀했던 결과입니다. 그게 전시실이 아니고 원래 강당으로 쓰던 곳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해서 장관님께서도 처음 아셨을 거예요.

공주 땅을 파면 유물이 나오는데 유물은 늘어나고 전시실은 부족하니까 강당을 전시실로 개조한 거예요. 개조하면서 전시실에 맞는 시설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것은 문화재 관리정책이 대단히 미흡한 결과다, 이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본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金成鎬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국보급 문화재가 박물관에서 강도에게 도난 당했다는 것은 사십 몇 년 동안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에도 보도된 것도 없고, 보고서에도 보니까 관련자를 처벌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보고서에 보니까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고 鄭鎭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군이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새로 짓는 국립공주박물관이 신축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이나 인원을 보강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 같고, 그 분위기 자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보급 문화재를 서터문 하나로 지키고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 서터문을 열어놓았으니 강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저희 부에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어제인가 그제께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당직근무자와 박물관장 두 분은 중징계했고 당직담당은 그 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의 징계를 했으며 야외순찰 청원경찰 2명도 징계했습니다.

○金成鎬 委員 국립공주박물관장 중징계는 어떤 내용이에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는데 행자부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金成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鄭柄國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裴基善 자료 요구입니까?

○鄭柄國 委員 예.

지금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사건이 중요한 것은 국보급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립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침해 당했다면 일반 사설박물관이나 지방박물관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박물관이나 사설박물관에도 엄청난 국보급, 보물급이 있어요. 국립박물관이 침해 당할 정도라면 이런 박물관은 그 이상으로 열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자료, 지방박물관이 몇 군데 있고 지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급, 보물급이 얼마나 되고 또 사설박물관에는 뭐가 있는지, 정보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료를 정리하셔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관리대책이 무엇인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및 소속기관장 소개와 문화재청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문화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裴基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재청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이 기획예산처에 요구 중에 있는 내년도 예산확보 역점사업과 문화재를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 개선되어야 할 대책, 그리고 지난 3월에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들께서 중심이 되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주신 문화재청 위상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금년 말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할 예정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차질 없이 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사항도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이 보고드리는 주요 현안사항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鍾焱 문화재기획국장입니다.

宋寅範 문화유산국장입니다.

金奉建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金秉模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成鎬 委員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죽 논의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 또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沈載權 委員 문화관광부에는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작 문화재청은 서면보고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3쪽의 문화재 도난 예방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문화재 도난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은 총 2363점으로 이 중 비지정문화재가 전체의 96.3%로 2276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회수된 문화재는 도난문화재의 19%인 447점에 불과하며 지정문화재가 31점, 비지정문화재가 416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난문화재의 대부분이 비지정문화재로서 소장자의 공개 기피로 도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난문화재의 회수율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도난대상 지역이 주로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허술한 산간·오지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인력과 보호시설 없이는 도난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도난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안시설의 설치 및 강화를 위해서 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대하여 도난경보기와 보관용 금고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불교문화재가 다량 소장된 사찰의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관리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는 이런 현황자료가 다 되어 있고 주로 비지정문화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문화재 소장자에 대해서는 소장 유물현황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표는 작성 예시에서 보듯이 유물의 명칭과 재질, 제작방법, 규격과 특이사항, 유물상태 등 소장문화재의 특성을 소장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여 도난·분실 시 회수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 문중 등 주요 관리취약 소장처에 대해서는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사범 단속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불법문화재 은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도난문화재의 해외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국제공항과 항만 등 14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재사범의 신고와 도난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李元昌 委員 청장님, 불교문화재가 다량 소장된 사찰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지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李元昌 委員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떤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유물전시관으로 만들 것입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유물전시관은 주로 사찰이나 서원에 CCTV를 포함해서 시진장치, 전반적으로……

○李元昌 委員 지금까지는 어떻게 소장되어 있는데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지금은 개인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元昌 委員 허술한 유물전시관을 건립해서 오히려 여기에 주요문화재가 있다고 알려주고, 거기가 털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개인이 잘 소장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 주요문화재가 있다고 알려줘서 오히려 보안만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財廳長 盧太燮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찰전시관에 보관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보관한 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한 이후부터는 관리가……

○李元昌 委員 그러면 유물전시관이 건립되면 자신 있게 도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절대 도난이 없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제가 절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대폭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柄國 委員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서원, 문중 등 주요 관리취약 소장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財廳長 盧太燮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난방지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도난 시에 운영하는 체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鄭柄國 委員 문화관광부에 자료 요청 하나 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예산심의 이후에 문화관광부 측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안은 아니지만 일차적인 안을 기획예산처에 올리기에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조금 하는 듯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해요.

이미 5월 말에 일차적으로 기획예산처에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을 올렸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柄國 委員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브리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지역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문화원 확충이나 문화원을 새로 짓는 다든가 이런 예산을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 나중에 늘리려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사업으로 꼭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올려놓고, 지금 여기 주요현황을 보고하는 데도 예산계획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지도 하나 없어요.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로 들어가고 정기국회로 들어가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처 간에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확충할 거예요?

개별적으로든 어쨌든 일단 자료 주시고 지금 기획예산처에다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개인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설명하세요.

○姜申星一 委員 문화재청장에게 건의·검토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궁을 촬영할 때 무조건 개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무조건 금지하고 있지요? 주간과 야간의 사용에 대한 것도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또 고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촬영을 한번 허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로부터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허용할 것은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文化財廳長 盧太燮 위원님,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주간촬영은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하고 야간 촬영도 기록영화라든가 보도용, 학술용 이런 때는 다 조건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姜申星一 委員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다큐멘터리의 문제는 아니고 영상산업이 중심이 된다면 아무래도 드라마 내지 영화촬영입니다. 영화촬영이 현장에서 제일 복잡한 작업입니다.

고궁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완조치를 더 하더라도 허가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허가는 해 주세요. 해 주면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하세요. 강화하되 무조건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영상산업 발전에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건의하는 바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고궁에서의 드라마 야간촬영을 허용해서 화재위험성이 따른다고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TV드라마 야간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표현수단이든 간에 문화예술을 표현하게 해 주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궁을 정부에서 독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가치만 중요시 하면 헌법상에 보장된 다른 기능을 못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의 안은 문화재청과 방송영상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떤 작품은 촬영허가를 내주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또 대본이나 콘티 같은 것도 판단해서 안전상의 기준을 최대한 만들어 주고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받은 후에 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립공주박물관 강탈사건 이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관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 소장 문화재는 문광부고 여타는 문화재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지금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의 박물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으로 보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책은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겠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도서관박물관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정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별문화재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수리·보존 그리고 매장 문화재에 저희들은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안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부 본부에 있는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정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전체 총괄적인 기능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박물관의 보안관리는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이 아닌 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 서원이나 문중 등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보관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나간다는가 사찰 같은 데는 시설비를 주고 있고 국립박물관은 중앙박물관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국립박물관은 문광부 책임이고 여타는……

○文化財廳長 盧太燮 책임이라기보다 원래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은 문화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문광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沈載權 委員 어쨌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의 관리 책임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李允盛 委員 문화재청에 대한 자료요청인데 일곱 가지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타자로 제가 찍어왔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건의 및 궁금증 하나만 풀고 지나겠습니다.

지금 沈載權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장, 어떻습니까? 개인소유 문화재의 도난이 잦다 그리고 회수율도 낮다는데 문제 아닙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비지정문화재……

○李允盛 委員 비지정문화재도 하여튼 문화재는 문화재 아닙니까? 이것을 국공립박물관에 보관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財廳長 盧太燮 박물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태조사 시에 국공립박물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도난당하는 데가 서원, 문중 이런 곳인데 이분들은 보관을 하라고 권장을 하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것을 다른 국공립박물관에 위탁을 하면 소유권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를 국공립박물관에 보관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장해도 안 듣기 때문에 또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기념되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관념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그 장소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참여정부시대인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동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기로 여야 간사위원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成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鎬 委員 최근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스크린쿼터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영화를 비롯한 문화를 일반상품과 똑같이 획일적인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영역에서의 개방 문제는 단순히 일반상품의 시장개방 문제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문화시장

의 개방은 국제사회가 2005년까지 문화협약을 만들어서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흐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극장을 찾는 관람객의 연령층을 살펴보니 14세에서 18세가 28%이고 19세에서 29세가 46%, 30대가 16%, 40대 이상이 10%로서 결국 10대와 20대가 전체 영화 관람객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무분별한 전파 수용이 문화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문화시장의 개방 문제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는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을 문광부가 견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는 외국 영화의 국내 진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인정하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라는 미국의 개방 압력과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스크린쿼터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문광부의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드컵 휘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가 메가 이벤트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도율이 75%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화권자를 포함한 각종 대형 사업자의 선정 및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서울올림픽 때는 98개 업체가 휘장사업에 참여했는데 2개 업체를 제외한 96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월드컵 때는 중소기업 94개 및 하청업체를 포함한 300개 업체가 휘장사업에 참여했는데 모든 기업이 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21개 업체가 참여해서 11개 업체가 부도 또는 사실상의 부도 직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

다.

이러한 국가 메가 이벤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계속되는 부도,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한 잇따른 소송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 선정요건 및 선정과정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모든 부실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FIFA, NOC, OCA 등과의 불공정한 계약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와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실업체인 코오롱TNS월드를 월드컵 공식상품화권자 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 공식상품화권자 대행사인 코오롱TNS월드는 FIFA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코오롱TNS월드가 88올림픽과 대전 엑스포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그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FIFA에 추천문서를 보내는 등 명백히 직무상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험, 자금력, 조직력도 없는 코오롱TNS월드를 월드컵 휘장사업체로 추천함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이 월드컵 폐막 이후에 부도를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동반 개최국인 일본과 명확히 비교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 상당히 큰 광고회사인 덴츠사가 월드컵 휘장사업체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결국 공개입찰방식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코오롱TNS월드를 공식사업권자로 선정하도록 일조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잘못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저는 시급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스포츠 행사에 휘장사업 참여업체의 잇따른 부도가 계속 답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FIFA 및 NOC, OCA 등과의 계약관계, 또 조직위원회의 상품화권자를 포함한 각종 대행사의 선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또 세우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실업체인 코오롱TNS월드의 월드컵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 명백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월드컵 수익금이 많이 남아 있으니 월드컵 수익금 중 일부를 직접 피해 입은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현재 법원 관리하에 있는 월드컵 물품을 적극 활용해서 도산한 중소기업체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공동배달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시장은 그동안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불법, 탈법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집에 있었는데 아파트 벨이 울려서 인터폰을 받아 보니까 리모콘 선풍기를 가져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주문했나 하고 문을 열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신문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지국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네 신문을 6개월간 보면 리모콘 선풍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한테 잘못 걸렸다, 물론 그 신문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고 또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위원인데…… 제가 직접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전히 신문시장의 불공정한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예요. 그분이 저희 집에만 왔을 리 없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전 예고 없이 벨을 누르면서 이런 식의 판촉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 관련한 뉴스통신진흥법의 후속조치, 종합적인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방안, 문화재의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金成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委員 李元昌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항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정책을 권장하고 주도하는 부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언론정책이라기보다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이라든지 법에 규정된……

○李元昌 委員 그런데 KBS이사진이 어제인가 새로 선임되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李元昌 委員 그렇다고 들으시면 안 되지요. 새로 구성된 이사진이 몇 명이나 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방송위 소관이어서 그 과정에 대한 결과만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KBS 이사는 11명, 방문진은 9명입니다.

○李元昌 委員 그런데 지금 KBS 사장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것이지요. 鄭淵珠 사장이 4월 25일 임명되었는데 임기만료는 5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서 새로운 사장을 뽑겠지요. 그러면 지금 사장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법적 지위를 말씀하십니까?

○李元昌 委員 법적 지위를 포함해서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다시 방송위원회 이사진의……

○李元昌 委員 좋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진이 KBS 사장을 다시 뽑아야지요. 그러면 지금 사장은 갈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개연성은……

○李元昌 委員 지금 있는 사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잠시 맡고 있는 사장입니다. 장관께서는 본인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떻든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KBS 사장의 지위에 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방송위원회 소관이고 제가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委員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정책도 관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방송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방송위원회 소관인 것만도 아니에요. KBS의 제반사항도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국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래서 제가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李元昌 委員 좋습니다. 물론 국정감사 때 KBS 사장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고 방송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해야 할 질의입니다마는 언론정책도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의 입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장관이 주요부서의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李 장관께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李 장관께서는 인사를 할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직 저는 퇴임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과 제 임기에 대해서……

○李元昌 委員 문제는, 저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있는 사장이 모든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는데 주요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주요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李 장관의 소견은 어떻게습니까?鄭淵珠 사장이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이것은 판례도 나와 있고 다음 사장이 업무집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사조치는 미루는 것이 관례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 생각에鄭淵珠 사장께서 남아 있는 한 달 임기를 하시려고 KBS

사장직을 수락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李元昌 委員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참여정부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서 새로운 사장을 뽑는데 자기가 될 줄 알고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물론李 장관이 관련된 부서의 장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KBS 사장은 자기가 다음에 사장이 또 될 것으로 미리 예단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참여정부는 그렇게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KBS 사장과 저는 KBS 사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인사전화 한 번 드린 이외에 한 번도 만나 뵈지 않고 통화한 적도 없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裴基善 위원장, 金成鎬 간사와 사회교대)

○李元昌 委員 그러면 일부러라도 만나셔서 그것은 관행을 무시한 독단이고 새로운 사장이 부임할 때까지, 사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주체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元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李元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載權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權 委員 먼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독창성을 보존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미국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쿼터 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최근에 색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13일자 한미투자협정 쟁점분석보고서라고 해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외국이 투자한 기업에 한국산 제품의 사용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협상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한미투자협정의 주요내용이라는 자료를 보낸 온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강제적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사정이 이렇다면 스크린쿼터로 인해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일부 분들의 발언은 협정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어서 외국인 투자 영화관만이 스크린쿼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불필요한 논의를 해왔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배급 및 상영과 관련해서 외국인의 투자지분을 유치하고 있는 곳은 불과 4곳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를 빼고 나면 정작 영화상영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시네PLEX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굳이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는가 싶은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들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관계당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투어왔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국정홍보처 관계 질의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 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안보고에는 꽤 전망이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보도를 보니까 꽤 어려운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고 지금이라도 남은 2주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라크전 파병 동의와 관련해서 아랍권 IOC위원들의 태도는 어떤지, 우리 대한체육회장이 그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풍문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 우리 정부로서 남은 2주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마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사유들로 해서 정작 문광부가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문광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또 어차피 우리 위원회로서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의논을 해야겠기에 더욱이 문광부의 입장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우선 인터넷신문에 대해 정기간행물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범주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므로 해서 정기간행물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피해 구제나 이런 부분도 여타 활자매체들과 함께 의무를 갖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광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언론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입국할 때 입국사증을 얻는 데 있어서도 언론인 신분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또 현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문광부에서 작년 1월에 인터넷신문사 특과원이 미국에 입국할 때 우리 인터넷신문은 정간법상 정기간행물은 아니나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신문에 관한 정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광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터넷언론은 그 자체로서 방송·통신융합부분에 관해 검토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정간법에 부분적으로 언론매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거쳐서 따로 인터넷매체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나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작업이 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해서 일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를 정간법을 개정해서 주고 나머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인터넷매체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독자인쇄시설 확보문제도 옛날 언론 기본법의 잔재라고 해서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도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언론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언론피해구제제도 이를테면 신문편집규약이나 편집권 독립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설치문제에 대한 의견, 신문시장 정상화문제 등에 대한 문광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沈載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鎭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鎭碩 委員 鄭鎭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문예진흥기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대체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우선 경륜·경정수익금을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로또복권은 기본적으로 기존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복권인데 그 수익금은 기존의 10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이었는데 최근 통합복권법 제정 초안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잠깐 놓쳤습니다.

○鄭鎭碩 委員 통합복권법 제정 초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사용용도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계에서 지적하는 것이 통합복권법 초안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우리가 대체재원으로 쓰려면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드는 입법과정에서 저

희 문광부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항이만 들어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鄭鎭碩 委員 아무튼 문예진흥기금 대체재원 마련방안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복권법이 제정될 경우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명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정부 내에서는 포함시키자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鄭鎭碩 委員 그런데 지금 초안이 마련되는 데 거기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문화예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鄭鎭碩 委員 알겠습니다.

공주박물관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망연자실해서 두 다리에 힘이 죽 빠져 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1층 전시실은 전시실이 아니라 강당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는 얘기도 그날 처음 설명을 들었는데 CCTV가 물론 없었고 전시실을 차단하는 셔터도 없었습니다. 전시실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라서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공주박물관의 직제 개정문제를 건의드렸고 공주박물관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11개 국립박물관 중 공주박물관만이 관장의 직급이 5급이고 경주가 2급, 전주하고 광주박물관이 3급, 나머지가 4급입니다. 이것이 공주박물관이 신축되면서 4급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데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직원 1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박물관의 자체 인원이 12명인데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11명이 증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공주박물관의 경우는 다른 신규박물관과는 달리 기존의 공주박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신규박물관 개관·이전업무를 또 수행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인데요, 이전 이후에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주박물관의 직제를 상향조정하셔서 충원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鎮碩 委員 이전까지는 앞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지금 공주박물관의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고 어차피 4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12월 이후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상향조정해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답변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박물관 직제는 본부에 올린 상태입니다. 10월에 이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인 8, 9월 정도에는 직제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직제조정을 현실화시켜 주서 가지고…… 당장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이전계획에도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인원들이 증원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후속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후약방문격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공주박물관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66평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뉴욕박물관 같은 경우는 23.5평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박물관은 42평당 1대, 전주박물관은 19평당 1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장관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그리고 제가 뉴욕박물관을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뮤지엄 글라스라고 해서 유물들을 싸고 있는 유리가 아주 특수재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박물관의 유물들을 담고 있는 유리는 보통유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최근에 짓고 있는 박물관들은 전부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뮤지엄 글라스가 뭔지는 아십니까?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속에 필름을 집어 넣어서 접합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유리를 쉽게 깨뜨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그런 특수유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현재 짓고 있는 새 박물관들에는 전부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구박물관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유물들은 뮤지엄 글라스로 보호될 수 없는 것입니까?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지금 구박물관들에 있는 진열장들은 전부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鄭鎮碩 委員 뮤지엄 글라스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國立中央博物館長 李建茂 예.

○鄭鎮碩 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쿼터를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화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화주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간에 어떤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익으로 대두가 되었고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IMF 직후에도 스크린쿼터문제가 논란이 되었었지요? 그 당시 속기록을 뒤져 보니까 문광부는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만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일관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대를 상회하는 상황으로 발전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결국 한미투자협정 교섭은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할 텐데 외교통상부에서 그동안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그 당시 20%대에 머물러 있을 때 80%의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독과점이고 불공정한 것 아니냐, 한미투자협정이라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거래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미국영화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정상화시킬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논리로 스크린쿼터 보호 논리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한 설득논리가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좀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논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었음에도 계속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려는 어떤 논리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40%라는 말이 나온 근거가 뭐냐 하면 현재 규정되어 있는 146일이 1년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40%라는 수치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46일을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20일씩, 20일씩 경감해 주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의무일수는 106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9%에 해당하는데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영화 점유율이 48% 정도였고 제작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50%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40%가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은 만약에 40%를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수도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 놓고 일단 40%가 넘는 것을 안정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40%라는 것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여러 가지 근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시장 전체적으로 약 500억 가까운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객점유율은 높았지만 영화산업 자체의 속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골병이 든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블록버스터 몇 편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이후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몇 편의 제작실패가 투자위축으로 당장 이어지는 지금 현재의 불안정한 영화산업의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40%가 안정적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가 설사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미투자협정에서 허용으로 삼을 수 있느냐, 또

BIT라는 것은 FTA를 전제로 한 것인데 FTA, 더 나아가서 WTO의 다자 간 무역협상에서 시청각물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보다 본질적이고 국가적이고 전체 산업, 미래 산업까지 다 확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당연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鄭鎮碩 委員 아까 金成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우리 문화의 주권 수호를 우선순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리우드 영화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직접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 영화도 우리의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어떤 문화적 이질감을 갖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보호막을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본 문화를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개방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 입장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일본 문화의 전면개방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폐해를 들어 우리가 차단막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현재 할리우드 영화는 전면개방 되어 있고 스크린쿼터는 시장의 과다한 점유를 막는 것이지 그 개방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화는 전면적으로 한국에 개방이 되어 있고 직접 배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일부 영화가 지금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완전 성인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보는 영화는 지금 현재 3차 개방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본 영화는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개방이 필요한 경우이고 미국 영화는 완전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과다한 점유를 막으려는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鎮碩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장치가 지금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鄭鎮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 10분에는 당연히 답변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鄭鎮碩 위원님이 저한테 문의하셨을 때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예외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질의시간 10분에 답변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鄭鎮碩 委員 장관이 답변하시는데 자꾸 시간이 가더라고요.

○委員長代理 金成鎬 한 위원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시키면 장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과 회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질의시간 10분 안에 답변시간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鄭範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範九 委員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6월 4일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範九 委員 이것은 가장 최근의 것이고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왜 오늘 문광부 주요현안 보고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위원회가 방송위원회도 같이 소관하기 때문에 문광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정책이라면 오늘 현안보고에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부분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鄭範九 委員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6월 4일 문광부가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신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

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는 현재의 방송법 27조,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체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법 92조2항을 방송정책 일원화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문광부의 劉震龍 문화산업국장은 방송영상계획 수립은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관광부의 고유업무다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문화관광부는 손을 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정책권에 대한 소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에 4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방송법을 만들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조항으로 합의를 할 것이냐, 협의를 할 것이냐 해서 합의로 되었습니다.

우선 장관께서는 이렇게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정책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방송위원장의 6월 4일 기자회견, 즉 관련 방송법이 방송영상정책의 일원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한 방송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정책 소관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협의를 진행시켜 온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보면 외주제작 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보고되어 있는데 방송채널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송위원회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금 우리 국가가 지정한 보물 중에 굴뚝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다 파악하지 못하셨겠지만 유일하게 굴뚝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에 있는 아미산 굴뚝입니다.

(그림을 보이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굴뚝이지만 현재 보물 8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굴뚝일 뿐만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사면에 조각도 부조를 했고 장식적 조형물로서도 작품으로 평가받고 궁중건축물의 하나로도 평가 받아서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동네에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착각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 1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궁원인 경복궁에 있는 보물의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우연히 접한 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궁궐에서의 과도한 문화행사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양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덕수궁을 한 예로 들면 현재 덕수궁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미대사관저 건설 문제로 미국 측과도 갈등을 빚고 있고 또 이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과 문화재보호시민단체 간에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덕수궁은 임진왜란 후 전란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선조가 14년간 거쳐하다 승하한 곳이고 또 광해군과 인조가 직위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는 덕수궁에서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에만 무려 11개 단체 33회의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것은 제외된 순수 외부행사를 말합니다. 한 달에 5번 이상 궁궐 내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관람로 주변에 사진작품이나 각종 포스터, 천막부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궁궐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벤트장, 공원행사장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도 3개 단체에 26회의 행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미 6건의 문화행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궁궐이 생활 속 가까이, 시민들에게 가

까이 다가가는 행사는 일정부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나친 행사 시행은 문화재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덕수궁 가족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람객이 많이 와서 중화전 앞의 박석이 내려앉아서 보수했습니다. 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품격이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행사가 궁궐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창경원을 유람지화 했던 것처럼 궁궐을 공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문화행사가 궁궐 안에서 펼쳐져 많은 국민들이 역사 속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처음과 같은 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덕수궁 외부 문화행사의 몇 가지 실례를 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개최한 ‘책마당 큰잔치’라는 행사가 있는데 도서 전시, 작가 사인회를 한 것입니다. 요새 국제전시장도 많고 교보 같은 경우는 자체 전시공간도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민족의 유산인 궁궐에까지 끌어들이서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 ‘서울관광사진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울의 자연공간이나 문화유적, 예술행사 등의 사진 전시를 공원 안에서 한 것입니다. 과연 덕수궁이 적합한 장소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문화재가 훼손되는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鄭範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鄭範九 위원님 때문에 연기가 나오는 굴뚝도 보물로 지정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高興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委員 두 가지만 장관께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6대 들어온 이후로 정부의 언론탄

압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고, 金大中 정부가 끝나면서 이제 언론문제는 끝났나 했는데 盧武鉉 정부 들어온 이후로 사실상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변지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 들어 특정언론 죽이기를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의 특정언론 죽이기는 청와대, 각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가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선 청와대가 언론보도를 5단계로 분류해 매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지금까지 25개 부처·청에서 각 문제 보도에 대해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100일 동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의뢰한 것이 무려 37건입니다. 이것은 출범한 지가 100일을 넘은 정부로서는 문민정부 5년간 27건, 국민의 정부 5년간 118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는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언론보도를 분류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문광부에 유리한 것은 공정보도나 건전 비판으로 분류하고 불리한 것은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공동배달제 반대 신문기사는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하고 경향, 한겨레, 국민, 세계, 문화 등 찬성 신문기사는 공정보도로 분류했으며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세계화지원사업이 영세한 콘텐츠 업체들의 직간접적인 성장엔진이 되었다는 5월 21일 전자신문 기사는 호평으로 분류하는 등 입맛에 맞는 보도만 공정보도 내지는 호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인수위 출신 정치권 인사, 이 사람은 선거 당시 盧武鉉 후보의 정책 특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민다는 소문과 비전문가인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5월 9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한 바 있으나, 6월 4일 그 인사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문화관광부는 임명절차가 적법했다는 영똥한 발표를 하면서 언론보도의 자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자의적 언론보도 분

류방침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문화관광부만이 라도 솔선해서 먼저 보고를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7일부터 발효된 개정 신문고시 역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언론의 목을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개정을 주장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속적 증가, 신문협회의 자율적 규제 실패, 위약금 징수 미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신문 강제투입은 대폭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 위약금 부과 역시 신문고시 부활 전 11%에 불과했던 것이 2002년 하반기에는 95.8%로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미납의 경우는 경영악화상의 이유로 유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182억 원을 부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문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산업이므로 탈세의혹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면 되고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신문시장 전반에 대해서까지 공정위가 직접 개입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신문에 대한 이중 규제인 동시에 신문이기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대로 신문고시의 즉각적인 철폐를 재차 촉구합니다.

문화관광부의 신문시장 개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은 신문도 산업이기 때문에 신문 진흥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자율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의 보도기능으로 인한 공익성 때문에 현행법은 대기업의 출자제한이나 경영금지 등의 조항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신문에 대해서 공익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신문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국내외 언론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 자립을 이루려는 신문사에 대한 투자는 제한해 놓고 경영상의 문제로 적자에 허덕이는 신문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문을 산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경쟁자에 대해 스스로 경영합리화나 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억지로 연명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입장에서 공동배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공동배달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신문들에 대해서는 왜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언급도 없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정치적 오해를 받더라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보도 일일 보고, 공정위의 신문시장 직접 개입, 공동배달제에 대한 기금지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메이저 신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마이너 신문의 영향력을 키워서 모든 신문을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특정언론을 죽이기 위해 청와대, 문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체작전을 펼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이 재차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방침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이 나 주니어보드를 폐지하라고 주장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지금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高興吉 委員 몇 명이나 임명하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2명을 임명했습니다.

○高興吉 委員 T/O가 3명까지인데 앞으로 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현 단계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高興吉 委員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논공행상에서 밀려난 측근 세력들을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행정부에 포함시켜 그들의 불만도 달래고 부처조직도 감시하는 과거 히틀러식의 나치친위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관 정책보좌관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현 盧武鉉 대통령의 선거참모들이 대거 발탁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초반인 이들이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2급으로까지 내정되는 등 정권 창출 공신들에 대한 직급 인플레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4, 5급의 젊은 관료들을 발탁해 盧武鉉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소위 주니어보드라는 것을 통해 공무원조직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대통령의 사병으로까지 전락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정치공무원으로 양산하겠다는 의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나온 盧 대통령의 “공무원 개혁주체세력 형성” 발언은 마치 우리 사회가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 주니어보드, 개혁주체세력 이러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鎬 高興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鄭東采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辛基南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南 委員 李滄東 장관이 오신 이후로 말이 많습니다. 영화감독 출신이 왔다고 해서 이색적

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얼마간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우려가 많이 불식되었다, 현장문화예술인 출신이 종전과 다른 신선한 면모를 보이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초 현장문화예술인 출신 장관으로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내셔야 합니다. 역시 문화관광부장관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임무는 저는 문화 증진·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는 문화가 크게 도약해야 할 시대이고, 기점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일, 관광의 일, 문화재청의 일도 있지만 보좌하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장관은 문화진흥을 위해 직접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성을 가져야 하고, 현장성 부분이 다른 장관님들과 다른 **李** 장관만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든다면 현장성과 함께 봉사성, 이것을 두 번째 강점으로,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국가는 예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문화적 기반과 조건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 장관들이 혹시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마치 시혜적인 조치로 이해하거나 업적을 과시하거나, 이런 데 빠지기 쉽지요? 그런데 **李** 장관은 장관을 마치면 다시 현장문화예술인으로 복귀할 것이니까 본인이 돌아갈 현장을 위해서라도 성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 장관이 젊어진 역사적 소임을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李** 장관은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현장성과 봉사성이 역사적 소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관의 모습은 언론개혁운동가 **李滄東**, 영화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李滄東**, 영화감독 출신 **李滄東**, 이런 것만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언론에 비춰진 장관의 면모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언론이 장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자꾸 두 가

지로만 몰고가려고 것 같아요.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점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成鎬** 간사, **高興吉**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이것이 과연 영화인들의 집단이기주의입니까? 그리고 정부 내에서 부처마다 합의할 수 없는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반대하는 경제관료, 재계, 일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대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서 지금 행자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의결해서 행자위에 보낸 바도 있고, 그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느 정도나 열의를 갖고 계신지, 전임장관 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이어 받고 계신지, 지금 이것이 행자위에 계류 중인데 행자부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이 법안에 거의 과반수 의원이 사인을 했어요. 사인했다고 나중에 다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본회의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행자위 위원님들도 많이 찬동을 하고 있지만 행자부,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3년째 계류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위업입니다. 문화국가로 가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가 관건입니다. 행자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재계가 반대한다’, ‘경제에 타격을 주니까 근로자들을 놀게 하면 안 된다’인데 지금 뭐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같은 것도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날 단골메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들 그렇게 많이 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제도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쉽게 되는 것이예요. 어차피 주5일 근무와 더불어서 공휴일 조정해야 되고 또 노동부에서 휴가제도를 전면검토 중입니다. 이것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것은 핑계고 그 의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행자부장관과 국무회의에서 격론을 벌여 주세

요.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이것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행자부, 노동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정보공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약 80%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모범사례라서 다른 정부 부처에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정보가 공개된 이후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보공개 자료방 6월 12일자에 게시된 자료가 있어요. 외국인 고용추천권에 보니까 개인의 신상명세, 인적사항이 너무 노출된 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개범위에 대한 원칙이 부처 내부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청을 차관급 문화유산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자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공립학교나 국립연구소에 문화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합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를 99년도에 만들기는 했는데 좀 미흡해요. 대학원 설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급인력 배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연수원 설립이라든지 대학원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아닙니까? 이런 유관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체계적인 양성 또 이것을 활용하는 데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高興吉 辛基南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秉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秉浩 委員 오늘 아침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미투자협정을 위해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열어 본 결과 양쪽이 팽팽히 맞서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관은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사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매우 완강한데 좀 전의 일본문화 추가개방 기본원칙을 보면 “이제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서 특정 국가의 문화유입 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 경제적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주권 논리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은 경제적 논리로 치더라도 스크린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문화주권의 논리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 단순한 영화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풀면 여타 여러 가지 대중문화가 다 풀리고 멀리 보면 민족의 혼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강한 자세를 취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국가의 문화유입 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미국 영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문화주권, 문화정체성을 얘기하지만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이 과연 그 영화의 콘텐츠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였느냐, 오히려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조폭영화라든지 폭력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점유율을 올렸다면 문화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건강부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지금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반대하는 논리에 여러 가지 점에서 허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논리나 내용면에서 좀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또 문화정체성과 관련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애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관도 친구들하고 어디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2차 가자고 할 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녁 먹고 나서 2차로 잘 가는 데가 노래방 또는 노래연습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열 명이 오든 다섯 명이 오든 노래하고 즐길 때 한 시간에 1만 원입니다. 세 시간이면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민들의 가장 적절한 휴게시설이 노래방이라고도 하고 노래연습장이라고도 하는 거기입니다.

지금 전국에 3만 5000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술을 못 판다, 맥주도 못 판다고 되어 있어서 놀러온 사람들이 노래라도 한 곡 부르려면 맥주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느냐고 해서 “법으로 못 합니다.”라고 하니까 술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갖고 들어와서 마셔도 업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약 300개 업소가 매일 적발된다고 합니다. 이 업주들이 그렇게 안 하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처벌받더라도, 자기들은 손님들이 맥주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수 없으니까 맥주를 내놓고 처벌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술을 내놓을 수는 없고 저알코올주를 갖다 놓으면 괜찮다 하니까 외국에서는 아무도 마시지 않는 것을 전시용으로 갖다놓는 것이 연간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어서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노래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들은 전부 무자료 거래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도 세월에 포착되지 않고 다 흘러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노래방 문제가 모든 업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고, 또 언제든지 적발하면 고발이 되니까 거기에는 항상 비리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년에 걸쳐 업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데도 안 고쳐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래방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PC방이든 비디오방이든 게임방이든 여기서 술 먹고 난장판을 치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런 법을 정해 가지고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노래방은 그런 것과는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노래가 시작되면 거기에 술이 들어가고 가무와 음곡이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범법자만 생기고 전과자만 만들어내고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빼내든지 아니면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판매를 하게 하고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도록 해서 양성화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복잡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高興吉 간사, 裴基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옛날에 미국이 공황에 빠졌을 때 무슨 산업이 가장 발달했느냐 하면 독서게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영화계가 그 덕을 본 것 같은데 이제는 이쪽으로 다 몰려 간다 이것이지요.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기에 이리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이 99년에 유네스코와 협약을 맺고 북한 문화재 보존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매년 10만 불씩 3년간 30만 불을 지급했어요. 또 지난 4월 12일에는 매년 10만 불씩 주기 뭐하니까 아예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일괄적으로 매년 10만 불씩 주는 것으로 사업계약을 맺자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를 통해서 지급한 30만 불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돈을 거기다 썼는지 아니면 다른 데 썼는지 지금 문화재청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10만 불씩 또 준다 이것이에요.

북한은 우리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역사적인 연구 같은 것을 왜곡,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처리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왜곡하고 고유의 문화, 유물을 변종시키는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매년 북한에게 10만 불씩 갖다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지난 정권의 북한 퍼주기식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 것인지, 30만 불을 주고도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문화재청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약탈 문화재나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기 위해 문화재환수국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시간 현재까지 검토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직원 2명이 증원되었다는 것 외에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가 단 한 건도 환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환수국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물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와 현황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裴基善 金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協 委員 우선 스크린쿼터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갈등이 발전해서 충돌

을 빚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룰 수밖에 없도록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정부 내에서 갈등을 노출하지 않고 원숙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한미투자협정을 앞두고 미국이라는 아주 강대한 상대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벌써 이렇게 큰 갈등이 노정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조용히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개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일과정에서 한일 간의 불운했던 과거사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종래의 방침을 시정해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로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중문화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과연 한일의 과거사와 무관하게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문화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인간들의 삶과 연결되는 일이고 양 국민 모두의 역사와 감정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인데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를 교류하는 차원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가 하는 것을 미리 점검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일부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중문화 추가개방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은 개방 스케줄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주박물관 안전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방문을 해 보았더니 정말 허술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 공주박물관에는 어떤 안전대책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라크전쟁 과정의 박물관 피탈 문제에 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입수되었다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도 유사시에 박물관, 문화재를 어떻

게 잘 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언론문제에 관해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주요 언론 간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과 보도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계속 긴장관계로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언론과 정부가 좀더 부드러워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장관께서 100일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관계 개선과 협력을 향한 새로운 방법과 생각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께서 노력하시는 새로운 취재관행과 브리핑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문 공동배달제에 관해서도 일부 언론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또 그것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되도록이면 갈등을 노정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 협력의 방식으로, 이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면 매일 같이 이 문제로 갈등, 또 거리마다 데모대들이 넘쳐나고, 어떤 문제 하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갈등의 방식이 아닌 상호협력의 방식으로 국정과 기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우리 문화관광부 분야에서도 그런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NGO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NGO단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재 명예관리인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진하도록 하는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떠한 제도이고 어떠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밀반출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찰, 경찰 어느 쪽에 어느 정도의 수사력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委員 李允盛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 ‘나 하고 관계가 없는데 부서를 잘못 생각하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뒤를 채보면 뭔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6월 13일 세무관서장간담회, 그리고 어제 경찰지휘관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직사회에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이냐며 비판하는 데 말이 좋아 비판이지 탄죽 거는 것 같다.” 또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 가르기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들으셨지요?

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오전에 개혁주체 또는 개혁을 주도하는 주니어보드, 이것은 자기가 보건데 “스터디 그룹 같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두 번째, KBS 교양프로그램인 ‘역사스페셜’이 끝난 뒤 후속 프로그램으로 ‘인물현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盧武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노사모를 주도했던 문성근 씨가 내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의 편향적인 시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대선 때 ‘노사모’,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국민의 힘’, ‘조아세’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대선 때 돼지저금통 불법모금으로 지금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적인 문 씨가 민감한 현대사 다큐멘터리의 사회를 맡아서 안 된다

는 시각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다음에 일본문화 개방인데 6월 9일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시는 일정 가운데 일본 중의원 본회의 연설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뒤이어 나온 한일정상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방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면개방이 아니라 추가개방 확대 검토다. 이것이 원칙이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 문제보다도 이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 개방한 분야와 아직 미개방한 분야에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 일본어 가창 음반, 국제영화제 미수상 애니메이션, 영화·애니메이션과 연동,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 오락용 방송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아직 대상도 정하지 않았고 언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석 달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창창한 기일 동안에 또 일본을 몇 번을 드나드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신뢰문제입니다. 개방을 한다면 뭘 어떻게 개방하고 언제 개방할 것인지를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질의입니다.

그다음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감독 시절에 스크린쿼터 반대시위에 참여하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李允盛 委員 장관직 걸고 “못하겠다”, 그러나 장관의 역할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아주 큼니다. 金振杓 부총리 왈 “영화업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영화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면서 영화업계와 합의를 이루어 한미투자협정에 합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결정한다면 그 즉시 물러날 것인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盧成大 신임 방송위원장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권을 환수하겠다는 주장은 방송의 주무기구인 방송위원회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보좌관을 보니까 행자부는 남해신문 편집국장을 데려다 났더군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문광부를 보니까 이영진 선생님, 조한기 선생님, 전부 민예총 출신입니다. 모 의원실 보좌관 출신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는데 둘 다 등록된 조직입니다.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는, 편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李滄東 장관께서 개인의 각오까지 실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배달제도 국고예산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답변인지, 혹시 “문화예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국고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신다면, 제가 국고지원금에 대한 개념 해석을 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자도 국고지원이다.’라는 것이 재정부의 해석인데, 다시 돌아가서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공동배달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부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우리 지역구와 관계되는 것이라서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지역별 거점도시에는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지정된 데만 지원을 하고 경주, 인천, 울산, 충남, 경남의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건립사업에서 미지정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문광부 측의 발전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소래철교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곧 지정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재청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允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柄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장관님,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기도 하고 대통령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네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말씀해 보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대화와 타협, 자율 분권이 있고…… 죄송합니다. 얼른 기억이 안 떠오릅니다.

○鄭柄國 委員 원칙과 신뢰.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원칙과 신뢰가 있고……

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鄭柄國 委員 제가 오전에 국정홍보처장을 상대로도 물어봤는데 국정홍보처장은 한 가지밖에 답을 못해요. 그래도 지금 장관님께서 두 가지를 답을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대통령하고 코드가 가장 맞는 장관들께서 이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답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요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3일에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의 개혁주체조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비서실장은 “각 부처의 업무혁신팀은 공식조직으로, 스터디 그룹은 비공식조직으로 활동하며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도 업무혁신팀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문화행정혁신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비서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은 공식조직으로 하고 앞으로 스터디 그룹을 비공식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비공식조직인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특별히 스터디 그룹이라는 어떤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鄭柄國 委員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대통령께서 만들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는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라’ 이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저희는 이미 문화행정혁신위라는 것을……

○鄭柄國 委員 좋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표방하신 것에 대해서 국정홍보처장조차도 해석을 달리 해서, 국정홍보처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여타의 또 다른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수행을 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관철이 되거나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재정적 지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각 부처마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장관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답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것과 이것이 섞이는 것인지, 같은 것이 표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마다 4, 5급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주니어보드를 신설해서 주체세력화한다는 방침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나를 따르라, 나한테 줄을 서라”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역사적 평가는 다음에 한다, 내 스스로 양심과 소신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 왕건에서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칭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대파를 몰아내고 철권통치를 하는 궁예왕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스스로 개혁 주체세력이라고 자임하실 수가 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사회에 이런 식으로 줄서기를 조장함으로써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겠다 그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제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취지의 일련의 발언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그룹이나 또는 공식적인 주체세력 형성이나 주니어보드를 앞

으로 어떻게 설립을 해 가지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일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력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자학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언론 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盧 대통령께서도 역시 언론 탓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증폭시켜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국정혼란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특히盧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 해 먹겠다”라는 발언을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가까운 분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인데 그것을 가십이 아니라 신문의 1면이나 TV 9시 뉴스의 머리기사로 장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있는 공식자리에서 “대통령직 못 해 먹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또 그것이 뉴스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고 대통령도 그러시고 대통령비서실장도 그렇고 언론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장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데 지난 6월 2일 모 신문에서盧 대통령 국정수행 100일 평가에서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국정난맥의 원인이 대통령 주변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이라고 40%가 답을 하고 두 번째로 집단지주의 때문에 그렇다가 20%,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부재하다가 14%, 언론의 탓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문적 지식 없이 잘못 보좌해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될텐데 반성은 커녕 언론 탓으로만 돌리는데 언론 탓으로 돌렸던 장관도 이것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했습니다.

○鄭柄國 委員 협의되었던 사항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

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鄭柄國 委員 좋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부 소관인지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 잉여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 그나마 영화계 출신 장관께서 강력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부처에서 얘기하는 대로 유·무형적 이익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경제부처 장관을 모시고 논의해 보자고 했는데 장관은 못 나오고 차관이 27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단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월드컵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치른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치른 이후에 성공적인 결과가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경기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호지부지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부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장관님 파리에 있는 가나 보부르 화랑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鄭柄國 委員 그동안 사기업이 파리의 문화중심지에서 한국 작가들의 해외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개인화랑을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중국에서 인수하려고 작업을 한다고 많은 화가들이 진정서를 내고 저한테도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파리 문화원이

아주 외진 아파트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50억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결위에 와서 잘려 가지고 실현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파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독립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을 때까지라도 또 지은 이후에라도 풍피두센터라든가 다른 화랑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몰릴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우리 문화센터를 하나 더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임대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파리 문화원에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 없는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으면 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법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과 더불어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해서 헤이그협약 및 유니드로와협약에 우리 한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왜 가입하고 있지 않은지 즉각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 문화재기록화사업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지금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옛그제 남북 간에 경의선 경원선 연결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남북 간의 문화교류, 체육교류,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께서 金元雄 의원이 북쪽에 가서서 체육대회를 남북이 함께, 그래서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載權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沈載權 委員 간단히 묻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4월 23일에 본 위원이 문광부에서 새로운 지상파 채널 설립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장관의 답변은 그런 것 없다고 얘기를 했고 케이블TV와 위성채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문광부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외주를 전문으로 하는 지상파 채널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裴基善 李允盛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李允盛 委員 장관님, 월드컵상품중소기업인피해대책협의회를 줄여서 월피협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李允盛 委員 이분들이 아침에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가운데 李滄東 장관이 도대체 안 만나준다, 걸 다르고 속 다른 분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꼭 만나 주실 분이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이 사태에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람은 처벌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마무리되어야 된다.’

아까 鄭柄國 위원이 지적했던 잉여금 1630억 중에 로열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보전이 가능치 않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만나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은 사적 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 얘기 듣는 것이 李滄東 장관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주는 기회만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추가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6시 45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裴基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먼저 金成鎬 위원님을 비롯해서 辛基南 위원님, 金秉浩 위원님, 李協 위원님, 鄭柄國 위원님, 沈載權 위원님, 李允盛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미국의 개방 압력과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저회 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문제를 문화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주권이라는 것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간단히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쿼터제를 우리 국가가 우리에게 맞는 제도라고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이것을 미국과의 투자협정, 다른 나라의 요구에 의해 우리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의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주권에 의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정책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GATT 제4조에 있는 무역협상에서 시청각물은 문화적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맞고 그 뒤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 협상이라든가 OECD 가입 협정 등 여러 국제 통상협정에서 그 원칙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 WTO 협상, DDA 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올라와 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화주권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고 BIT 협상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 입장이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나 결의안을 내서 이것을 지지해 주셨고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도 그러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요즘 이것이 현안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계 또는 경제부처에서 BIT 체결의 시급성이라고 할까, 그런 요구에 밀려서 스크린쿼터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대두되는 데 있어서 저회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부처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문제가 항상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거의 사오년간 이것이 때때로 현안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 부처 간의 심각한 갈등, 조정기능 상실, 이렇게 비쳐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현안마저도 심각한 갈등으로 비쳐지고 조정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경제부처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 원하는 쪽과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다른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委員 잠깐만요,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와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그 당시에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프랑스 의회에 가서 우리나라가 영화산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프랑스 의원들이나 EU 국가들의 문화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나 프랑스 같이 어느 정도 영화산업이 기반을 확보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미 자국의 영화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살려야 된다, 그 힘없는 나라들까지 합쳐서 연대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 한 가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국제기

구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金振杓 경제부총리, 이 양반만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담당국장을 할 때부터 강력하게 이 부분을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제 경제부처의 수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도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매년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다른 때는 이렇게 정부부처 간 갈등양상으로 비치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BIT 협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 절명한 것이냐, BIT 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사실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사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鄭柄國 委員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저희가 27일 경제부처 차관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본하고 작년 3월에 BIT 협정을 맺어서 올 1월부터 발효되는 양국 간 투자협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당연히 스크린쿼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쿼터 자체가 양국 간 투자협정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라고 보는 견해는 경제적으로나 보나 논리적으로나 보나 무엇으로 보든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BIT 협정 체결에 있어서 스크린쿼터 문제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기를 원하고 있는 미국 쪽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미국의 가장 이해당사자인 MPAA, 미국영화협회일 텐데 이 MPAA는 아시다시피 미국 영화산업이 워낙 커져서 항공산업을

능가하는 아주 큰, 미국의 국익을 창출하는 경제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정부에 대해서 어떤 로비나 압력에 있어서 힘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제 집단입니다. 그런데 MPAA에서 스크린쿼터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선 가까이로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쿼터가 풀어지면 미국 영화가 한국에서 더 많이 상영되고 더 많은 관객을 끌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일 텐데 사실은 스크린쿼터제가 지난 4년간 운영되면서, 그 이전인 67년부터 스크린쿼터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스크린쿼터제를 감시하면서 스크린쿼터제를 실제적인 정책 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오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 가운데 스크린쿼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지난 사오년 동안에 한국영화시장은 두 배로 커졌고 관객도 두 배로 늘어났고 매출액은 세 배로 늘었습니다. 미국영화도 똑같이 그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산업도 부흥시켰지만 영화시장 자체를 크게 키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영화 역시 당연히 두 배, 매출액 기준의 세 배의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있어서 미국영화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미국영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좀더 큰 의미에서 미국이 왜 이런 압력을 하는가를 봐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무역협상과정에서 시청각물 같은 문화상품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적 약속을 한국과의 BIT 협정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 풀게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삼고 그래서 다자 간 협상과정에서 그것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을 설득할 때 미국에게 실제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를테면 불법 해적판의 저작권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이라든지 용산전자상가 같은 데서 미국의 문화상품, DVD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복제 되는 것들이 미국 문화상품의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침해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정부가 강력히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지금

스크린쿼터제가 미국 영화계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한다든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 담당자들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BIT 투자협상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어떤 업종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협상과정에서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한미통상협상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파트너와 쉽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채널의 어떤 설득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영화계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너무 감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시절에 스크린쿼터를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취했던 분이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이 되시고 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분들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이 스크린쿼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가운데 워딩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변함이 없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임하겠다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현재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의 스크린쿼터문제는 문화관광부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바뀌게 되면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바꾸자는 이런 제안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의 합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되는 의사결정과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통상협상을 하는 경제부처 내에서 또는 외자유치를 바라는 경제부처 내에서 이러한 의견

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여론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李廷雨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개인적 의견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오보고요. 아직 정부에서 정책변화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스크린쿼터문제가 문화적 주권의 문제로서나,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로서나, 아니면 영화산업 전체의 미래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논리에 있어서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걸고”라는 표현은 제가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영화계에 있을 때 스크린쿼터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영화계 또 문화예술계 분들과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을 면담하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장관님은 옷 벗을 각오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같이 있는 부하직원들도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원칙 또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의 신상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제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무겁게 생각합니다.

○沈載權 委員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개인적으로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문화관광부 책임자로서 국가정책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의외의 사항을 접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 아까 질의한 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

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근거가 뚜렷한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沈載權 委員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BIT를 하더라도 외국인이 투자한 영화관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뜻밖의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 스크린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BIT상에서 스크린쿼터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축소나 철폐를 받아들이든 하더라도 그것은 외국인이 투자한, 특히 미국인이 투자한 영화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러니까 그 문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안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화업중에 전용시키면 만약에 미국자본을 투자한 영화관에 국산상품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산영화를 트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극장에서 스크린쿼터를 하든 말든 미국이 상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이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문화정책, 스크린쿼터를 100일로 하든지 90일로 하든지 200일로 하든지 거기에 관해서 미국이 시비 걸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자기가 투자한 극장에서만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미국이 시비 거는 것은 당연히 온당치 못하지요. BIT에 있어서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보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BIT를 체결해서 미국 투자자본이 영화업계에 들어오는 것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하는데 실제로 그런 돈들이 있을까라는 점에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투자하는 영화관에 대해서 스크린쿼터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투자하는 극장의 스크린쿼터를 풀어주는 것과 미국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투자자가 만든 극장에 스크린쿼터가 지켜지고 있는 것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스크린쿼터제 합헌판결을 내릴 때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은 모든 극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헌법정신에 맞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우리가 BIT상에서 스크린쿼터제를 받아들이다 하더라도, BIT를 하면서 철폐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내국인 소유의 영화관들은 얼마든지 스크린쿼터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니, 미국 쪽의 요구는 스크린쿼터제 자체를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 것이……

○沈載權 委員 그러니까 내국인이 소유하건 외국인이 소유하건 지금 미국 측 요구는 스크린쿼터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라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투자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에 한해서 내국인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바깥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하려는 업종 또는 그 범위 밖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크린쿼터 문제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沈載權 委員 외국인, 미국인이 투자를 해서 국내에 영화상영관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다른 내국인 상영관들도 똑같이 스크린쿼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외국인이 투자하는 극장에만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의 근거를 흔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극장에 있어서 어떤 극장에 어떤 지분 정도로 미국 자본이 투자된 것에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을 거기에서 예외로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측의 요구는 국내법으로나 또는 일반적인 논리로나 투자협정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沈載權 委員 아직도 조금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BIT를 맺게 되면 내국인이 소유하건 외국인이 소유하건 간에 스크린쿼터제에 어떤 변동이 올 때 그때는 모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의 “한미투자협정이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 영화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크린쿼터 준치가 BIT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과 논리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하는 국내 영화관에 한미투자협정 자체가 적용될 이유가 없는데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문제가 BIT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니까 BIT와 직접 관계가 없으면 우리 내국인 소유 상영관들은 스크린쿼터를 그냥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런데 미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크린쿼터라는 법·제도 자체를 고쳐달라는 요구입니다.

○鄭柄國 委員 BIT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런 뜻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沈 위원님, 그것으로 마무리해주세요.

○沈載權 委員 예,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식언치 않은데 나중에 다시 물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나 외교통상부

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설령 BIT를 맺어서 스크린쿼터 축소나 심지어 폐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외국인이 투자한 그 영화 상영관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 투자 상영관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스크린쿼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아보지요. 우선 서면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왜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委員長 裴基善 지금 이 스크린쿼터문제가 오늘 전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또 모든 분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金成鎬 간사가 먼저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분들의 질의를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金秉浩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金成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秉浩 委員 조금 전에 장관께서 정부 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은 충분히 있어야 하고 바람직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크린쿼터문제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회가 될 것인가, 또는 문화적인 주권이라 할지 민족의 정체성이라 할지 고수할 것은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도 좋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경제적인 논리와 문화적인 주권논리 이 두 개가 지금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될 수도 있고 둘 다 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한국 영화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영화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품 현상이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경제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잘 풀려나가고, 또 국민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 영화 팬들이 상당부분 빠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화관에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조폭영화니 무슨 영화니 이런 것이 정서에 맞으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소득도 많이 생기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영화의 점유율은 훨씬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내려가면 그때는 스크린쿼터제를 없앤 것이 잘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 하는 논쟁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경제적 논리로 들어가는 문화의 주권 논리로 들어가는 문화관광부에서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특정국가의 문화유입 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미국만은 안 된다는지 스크린쿼터는 지켜야 된다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헛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논리를 들고 나오는 쪽에서는 이것만 양보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익이 발생하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 하는 데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약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 이것은 오로지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잘못 비쳐지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기적 집단논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이 먼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경제적 논리든 문화주권 논리든 민족의 정체성 논리를 좀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보화·세계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정국가의 문화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무

의미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鄭鎭碩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 대중문화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막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풀어서, 아직까지도 전면개방은 아니고 일부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일본영화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일본말로 된 음반, 노래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문화를 제한할 것이냐 개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미국영화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다만 미국영화가 자유자재로 개방되어 있고 직접 배급도 합니다마는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는,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 지배를 막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지배의 문제이지 개방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영화는 이미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스크린쿼터가 지켜져야 되는 문화정책으로 이것이 경제논리에 밀려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든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스크린쿼터는 떼뗄하게 주장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정부부처 간의 이견처럼 강력히 논리전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내부 조정을 하고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논리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金秉浩 委員 그런데 시장지배 문제는 결과적으로 죽 나가다 보면 결국 문화주권과 관련되고 문화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또 시장지배 문제가 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앞뒷면이 다 같은 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李協 委員 충돌 가능한 문제를 조용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논쟁이 불기 시작하면 문화주권이나 세계 경제나 시장주의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나 해서 진짜 무슨 문화론을 뛰어넘어서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로, 반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무한한 논쟁이 전개될 수 있고 지식인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뜨거운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정부가 그 논쟁을 선도한다

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장관님께서 오늘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장관이 가지고 계시는 논리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료와 더불어서 잘 정리하여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27일에 재정부차관을 모시고 토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鎬 委員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인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국인 소유의 극장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金成鎬 委員 어떤 협상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한미투자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이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그렇지요. BIT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BIT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5년간 여러 번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자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라고 한 것은 BIT협상과 별개의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 BIT 항목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金成鎬 委員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沈載權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적절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는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BIT에서는 미국이 미국인 소유의 극장에 한해서만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거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金成鎬 委員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미국인이 소유한 또는 미국인이 투자한 극장만 스크린쿼터제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을 요구해야 옳은데 스크린쿼터제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극장 소유주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 소유의 극장인데 내국인 소유의 극장에 대해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IT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金成鎬 委員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 부분의 사실관계가 혼선이 있는데 미국은 BIT 협상에서는 미국인 소유이거나 미국인이 투자한 극장에 대해서만 스크린쿼터를 폐지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해석이라고 보는데 그 해석이 틀려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 문헌은 BIT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인이 투자한 극장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는데 스크린쿼터라는 것은 그것을 넘는 내국인 소유의 극장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金成鎬 委員 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이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닙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金成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 沈載權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국인 소유나 아니면 미국이 투자한 극장에 한해서만 요구하는 것이지 한국인 소유의 극장에 대해서까지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주세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沈載權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극장이 한두 개, 하나 정도로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미투자협정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개 정도에 투자되어 있는 돈은 무의미한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한국에서 멀티플렉스 산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 극장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그쪽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른 행정규제나 건축규제 때문에 포기했고 실제로 미국 투자가 멀티플렉스 산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도 “스크린쿼터는 자기들이 멀티플렉스 산업에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든 미국영화를 통해서 돈을 벌든 돈 버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본이 들어오지 못했고 대체로 한국자본에 의해서 멀티플렉스 산업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나 극장업에 들어오는 미국자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극장의 스크린쿼터제도를 신축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金成鎬 委員 장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관의 답변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하겠고, 스크린쿼터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예.

○金成鎬 委員 지금 BIT,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앞서 질의한 대로 미국인 소유이거나 미국인이 투자한 극장에 한해서만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지 한국인 소유의 극장에 대해서까지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KIEP의 해석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金成鎬 委員 아니, 그게 실제로 어떠냐고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그 해석은 협상원칙상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金成鎬 委員 아니, 협상의 원칙이 아니라 여기서는 미국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

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BIT 협상에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그렇습니다.

○金成鎬 委員 요구한 부분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해석한 부분과 부합되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미국의 요구는 미국이 투자한 영화관이나 내국인이 투자한 것과 구별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다 폐지하라는 것이예요?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예,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스크린쿼터제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면서 BIT라는 또 다른 국익을 가져다 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일반국민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BIT 자체로서는 스크린쿼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연관이 없습니다.

○沈載權 委員 문제는 ‘BIT를 해 줄 테니까 너희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해 다오’ 이렇게 바깥(bargain)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실제로 그렇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하도록 정확히 밝히는 것은 우리가 스크린쿼터 문제에 임하는 또 다른 전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드린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외교통상부에 혹시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스크린쿼터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BIT 자체에 스크린쿼터가 내재된 것처럼……

○文化觀光部文化産業局長 李普京 그렇지 않습니다.

○沈載權 委員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成鎬 委員 제가 질의하겠는데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 두 개를 연계시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북핵과 남북교류협력을 국민의 정부에서 병행했고, 참여정부에서 연계해야 될 텐데 왜 그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가를 심각하게 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지금 국장의 얘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안 해주면 미국이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조금 다릅니다.

○金成鎬 委員 어떤 측면에서 달라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한미투자협정은 아시다시피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들어오는 업종에 내국인과 똑같은 최혜국 대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장에 다른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런 업종에 해당하는 그 항목에 스크린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항목에 빠져있는 것이 마치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인 것처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고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주장되어진다는 말씀을 沈載權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 사실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金成鎬 委員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은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BIT 사인을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裴基善 장관, 지금 시간이 8시 15분 전인데 오늘 스크린쿼터 문제 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되고 있고 또 27일에 중요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대체로 오늘 아침에 보고한 내용 중에 동계올림픽유치 전망과 대책,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지원 대책,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는 아까 상당부분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사건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이 되어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장관께서 이 점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문예진흥기금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委員長 裴基善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權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듣고 싶으신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沈載權 委員 한 가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정간법에 관한 의견을 몇 차례 물었는데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간법 개정안에 내놓은 부분도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최소한 정간법상 인쇄매체와 같은 권리·의무를 우선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신문이 언론매체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광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인터넷신문도 사실상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沈 위원님의 견해와 같이 현 단계에서 정간법상 정기간행물 범주에 포함시켜서 법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있고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있고 또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취지라든지, 법적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하고 제도적인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裴基善 존경하는 李允盛 위원님.

○李允盛 委員 제가 아주 힘들 게 질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 대중문화, 아까 잘 들으셨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李允盛 委員 추가적인 개방조치는 개방을 전제로 한 얘기이고 한일정상 공동성명에서도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정을 보면 아까 누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기 개방된 분야가 있고 미 개방 분야가 있습니다. 미 개방 분야에 대한 개방인데 그 대상과 시기는 빨리 정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 질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盧武鉉 대통령과 외국 정상 간의 교류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상 간의 약속이고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미개방 분야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대상을 언제 어떤 시기에 개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연히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상하고 개방 시기는 빨리 밝혀야 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규모와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 관련업체라든지 관련분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李允盛 委員 빨리 해야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예상이나 평가를 한 뒤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李允盛 委員 그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해야 됩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允盛 委員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런 얘기가 되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李允盛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배달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얻어 왔는데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국고예산은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공동배달제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마는……

○李允盛 委員 지난번 본회의 답변에서 “공동배달제도 국고예산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이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배달제를 지금 몇 개 언론사가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산업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오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해서 용자해 줄 수 있다고 제가 4월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무슨 특정 언론사에 대주느냐’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갔고 지난 본회의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국고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진흥기금……

○李允盛 委員 그러면 실무자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국고예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국고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분명 국고의 개념에 들어간다. 다만 예산 표현에 의해서 일반 세입세출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으나 기금에서의 용자도 엄연히 국고지원으로 해석됨.” 이것이 재정부 국고과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공동배달제도 국고예산으로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달리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용자 아닙니까?

내가 확인해 봤습니다. 국고 지원대상 사업 중에는 “유통구조 및 시설 현대화”, 용자사업으로는 “유통구조 및 시설 현대화” 중 “출판구조 현대화”, “인쇄 및 서적기술 현대화” 이 부분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姜成求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용자를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그러면 국고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하고 재차 확인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允盛 委員 아닙니다.

여기 회의록은 장관님의 기침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李允盛 委員 여기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뭐 그렇게 대답을 해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용자해 줄 수 있다.”라고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

○李允盛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용자 형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것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보고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李允盛 委員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언론이라는 개념적 발상에서 시작될 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는 일단 언론이고 또 언론도 하나의 문화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李允盛 委員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유독 우리 장관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允盛 委員 아닙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다른 신문사도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매체에게만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열려 있는 것이고……

○李允盛 委員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언론산업, 신문산업은 좀 다르지요. 이것을 어떻게 공동배달제로 하고 국고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배달제가 특정 매체를 살려주고 특정 매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공동배달제가 특정 신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어서 어떤 형평성을 잃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장관의 견해라는 것을 알겠고 차관, 여기 내가 유권해석한 것 맞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部次官 吳志哲 재정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 국고와 기금은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국고는 정부예산……

○李允盛 委員 차관, 문광부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재경부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文化觀光部次官 吳志哲 재정부는 좀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아까 저희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李允盛 委員 그러면 국고예산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文化觀光部次官 吳志哲 저희가 국가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委員 국고는 틀리지요? 일단 국고예산이라는 말은 없지요?

○文化觀光部次官 吳志哲 국고예산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李允盛 委員 옆에 장관이 앉아 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직업관료는 칼이 들어와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委員長 裴基善 李允盛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李允盛 委員 이것만 끝으로 물어 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원래 언론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직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언론에 대한 믿음이 손상된 것 같아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장관되시고 나서 언론에 대해 어떤 실망을 하셨습니까? 이것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끝내도 좋겠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4월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라는 것에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소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의 목탁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언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정부의 일을 함께 하면서 언론의 소통기능 또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불행하게도 심각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때로 아침에 출근 길이라든지 이런 때 더 이상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 없어진다면 너무 제가 세상을, 또는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에……

○李允盛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辛基南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문화상 얘기

를 했었습니다. 사실 李滄東 장관이 순수예술분야에 계시다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순수예술분야에 계시던 분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순서를 밟으시는지 공연히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언론분야에서는 李滄東 장관이 언론에 큰 한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왜곡되었다든지, 장관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 가지고 엉뚱한 공격을 받는 수가 있어서 제가 해명성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金大中 전 대통령께서 자택을 방문한 어떤 분에게 한을 복수로 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언론분야 출신입니다마는 꼭 한 맺힌 얘기로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金秉浩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秉浩 委員 아까 장관에게 많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노래연습장이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노래연습장 안에서의 주류판매문제는 오래된 현안입니다. 99년 5월 경찰청에서 우리 부로 노래연습장이 이관되었는데 노래연습장이 그야말로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완화 같은 것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류판매는 상당부분 불법행위 업소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노래연습장 다수 이용자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를 양성화하는 문제는 저희 부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인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와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관련 부처,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양성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秉浩 委員 그런데 거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노래연습장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이고 이것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호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북한까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노래도 북한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업소를 운영하는가 보면 거기도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데도 출입을 제한하지도 않고 전부 생맥주나 주류를 제공하고 있고 술 제공 안 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 노래방이라는 업소를 외국에서는 청소년 들어오고 간단한 주류는 제공하는데 왜 한국만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외국에도 청소년 들어오고 일반 대중 들어와도 주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이 저녁 먹고 가서 남녀 성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술 한 잔 안 마시고 마음껏 노래 부르고 두세 시간 놀아라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실과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억지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업주는 안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제공하고 처벌받고 전과자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고……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하고 단속반하고는 항상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단란주점을 하든 유흥업소를 하든 노래연습장과 같은 가벼운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술집이라고 할까 노래휴게시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넣어 놓으니까, PC방이나 게임방과 같이 질서를 맞추려니까 술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해서 풀어주든지 완화해주든지 아니면 드러내 가지고 음식점 쪽으로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어야지 이렇게 계속 놔두면 문제만 발생하고 전과자만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일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유흥업소는 접대부 고용할 수 있고요, 단란주점은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이 업소들이 각각 분류되어 있는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

는 전제를 하고 이 업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단란주점의 주류 판매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업종별로 서로 상충되고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거기에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秉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을 보고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오늘 고생하고 나가서 저녁 먹고 2차 가자고 할 때 노래방이나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가자 이럴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싸고 깨끗하고 그런 데 많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싸냐 이것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단란주점은 못 가겠고 값 싸고 재미있게 놀다갈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허용을 안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너는 단란주점을 가든지, 유흥업소를 가든지가라.” 그것은 무리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법으로 막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裴基善** 우리 金秉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지금 당장 동네에 가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경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인데 허가를 해 주시고 세금을 거두시면 되고 그런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金秉浩 委員** 세금 다 내고 법 지키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특히 盧武鉉 정권이 들어서면 서민들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잘 살고 서민들이 놀 수 있는 휴게시설을 권장하고 해 주라고요. 그것이 코드 맞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裴基善** 장관께서는 그 문제를 검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감사합니다.

○**委員長 裴基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구두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金成鎬 위원님, 高興吉 위원님, 鄭東采 위원님, 李協 위원님, 李允盛 위원님, 尹鐵相 위원님, 申榮均 위원님으

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조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부 현안사항인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재정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보고를 계속해서 듣고 방송위원회 현안보고 및 KBS 결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제안설명】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

國會議員 權五乙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을 의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관련 전통문화자료는 전국에 약 40만 권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개인소장자들의 보관·관리능력 부족으로 훼손·도난 등 멸실 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 소장 기록관련 전통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무료수탁 집중보관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학적인 영구보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정신적인 문화유산의 영구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

성과 국학진흥원의 기본시설·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국학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학진흥원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학진흥원은 국학연구를 위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논문, 조사서, 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국학진흥원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소장의 기록관련 전통문화자료를 집중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로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국학진흥원은 수탁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수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다섯째, 국학진흥원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 교육, 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헤아리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16人)

姜申星一	高興吉	金秉浩	金成鎬
裴基善	辛基南	沈載權	尹鐵相
李元昌	李允盛	李協	鄭東采
鄭範九	鄭柄國	鄭鎭碩	玄敬大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千浩仙
전문위원	孫俊哲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관	李滄東
차관	吳志哲

차관보	裴鍾信
공보관	金鉉澤
기획관리실장	申鉉澤
종무실장	韓秦洙
문화정책국장	李成元
예술국장	白武
문화산업국장	李普京
관광국장	權慶相
체육국장	金泰根
청소년국장	金斗顯
예술원사무국장	成南基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李建鏞
국립중앙박물관장	李建茂
국립국어연구원장	南基心
국립중앙도서관장	林炳秀
국립중앙극장장	金明坤
국립현대미술관장	吳光洙
국립국악원장	尹美容
국립민속박물관장	李鍾哲

문화재청

청장	盧太燮
문화재기획국장	金鍾焱
문화유산국장	宋寅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宋奉建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金秉模

국정홍보처

처장	趙永東
홍보기획국장	黃鉉卓
국정홍보국장	黃載雄
분석국장	高昇羽
해외홍보원장	韓淮燁
해외홍보원의신협력관	朴明東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	高錫晚

【報告事項】

○議案回附

放送法中改正法律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5월20일 고흥길·이원창·신영균·권오을·김일윤·신기남·이윤성·정동채·김병호·엄호성·박재욱·이정재·황우여·남경필·심재권·김만제·김무성·정범구·이원형·현경대·정병국·강창성·권태망·김성호·강신성일 의원 발의)

5월21일자 회부됨.

國際會議産業育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5월30일 김병호·서병수·김진재·정병국·안경률·이원창·강신성일·심재권·박진·권철현·정형근·김무성·이강두·정의화·현경대·김용학·김형오·최선영·강창성·이윤성·유홍수·홍준표·권오을·김일운·이상희·정문화·원희룡·이연숙 의원 발의)

6월2일자 회부됨.

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5월30일 권오을·김병호·정창화·주진우·김광원·김일운·김정숙·박시균·박혁규·이상배·김용학·이상득·고홍길·이원창·김성조·이윤성 의원 발의)

6월2일자 회부됨.

放送法中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5월30일 김병호·서병수·권철현·이상희·김용학·안경률·이윤성·이원창·김진재·허태열·정문화·김형오·김무성·최선영·강창성·유홍수·홍준표·이강두·권오을·정의화·김일운·정형근·강신성일 의원 발의)

6월2일자 회부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6월9일 심재권·고홍길·김근태·신영균·김일운·이윤성·신기남·강운태·이미경·이근진·전용학·권기술·김영환·김운용·조배숙·구종태·김홍일·김택기·민봉기·김용학·최용규·남궁석·허운나·김성순·장성원·김원기·이희규·김정숙·서병수·김옥두·유재건·박헌기·천용택 의원 발의)

6월9일자 회부됨.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6월11일 정부 제출)

6월12일자 회부됨.

복권의발행및관리등에 관한기본법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6월5일 김무성·허태열·김진재·정문화·정형근·도종이·안경률·신경식·유홍수·김형오·권철현·정창화·강창희·박창달·권오을·홍문종·이주영·주진우 의원 발의)

6월7일 관련위원회로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請願回附

단학기공의생활체육종목지정에 관한청원

(2003년5월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78-5 세일빌딩 202호 전국단학기공연합회 회장 윤성균 외 187인으로부터 李相洙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26일자 회부됨.